

책소개

시대의 논객 **진중권의** 극우 파시스트 연구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1, 2**



죽은 박정희교의 노예가 되어버린  
일그러진 우리들의 초상, 조감제, 이인화, 이문열, ...  
극우 파시즘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들의 정신 상태를  
예리한 철학적 분석과 통쾌한 풍자로 해부한다.  
(개마고원, 8000원)

조선일보허위·왜곡보도  
인권정보자료실  
CPh1.19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

인권정보자료실  
CPh1.19

#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

121-714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내 (T) 3273-1529 (F) 714-1255

- ☉ 수신 : 각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편집국장
- 발신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 제목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발간 보도협조 요청

## 조선 일 보 를 해 부 한 다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요약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 발간취지

다사다난했던 98년을 보내고 새로운 9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바로잡고자 활동해왔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발족이후의 활동을 정리하고, 과거 조선일보의 잘못을 실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공대위는 자료집 발간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선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자료집 목차

- <제1부>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 한 언론학자가 조선일보에 띄우는 글  
- 조선일보 집중분석
- <제2부> 기사로 본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
- <제3부>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왜곡-음해보도 관련자료
- <제4부>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발족 성명서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강정구 문규현 문대골 성유보 이경숙

참가단체 (가나다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권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고려대학원총학생회 / 국민승리21 / 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도봉청년회 / 목회자신문사 / 매비우스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학작가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주노총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바른지역언론연대 /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 불교언론대책위 / 사월혁명회 / 새대구경북시민회의 / 언론개혁통신연대 / 언론지킴이천주교모임 / 여성민우회 / 유스넷 /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 인권운동사랑방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청년정보문화센터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이상 43개단체)

# 조선 일 보 를 해 부 한 다 !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일보 허위 · 왜곡보도 공동대책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조선일보왜곡보도근절을위한고려대학교연석회의/국민승리21/기독교교회협의회연론위원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도봉청년회/목회자신문사/매비우스/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학작가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노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바른지역언론연대/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불교언론대책위/사월혁명연구소/새대구경북시민회의/언론개혁통신연대/언론지킴이천주교모임/여성민우회/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유스넷/인권운동사랑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명화실천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청년정보문화센터/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프로듀서연합회/환경운동연합

(이상 43개단체)

## - 목차 -

### 1. 발간사

#### <제1부>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1. 한 언론학자가 조선일보에 띄우는 글
2. 집중분석1 ●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 위한 조약
3. 집중분석2 ●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10선  
● 이승복군 사건 조선일보의 작문기사 밝혀낸 김종배기자의 진실찾기
4. 집중분석3 ● 조선일보의 박정희 3선개헌/유신개헌 지지찬양 곡필사
5. 집중분석4 ● 조선일보의 전두환찬양 곡필사
6. 집중분석5 ● 조선일보의 노동·사회·인권 왜곡보도 7선
7. 집중분석6 ● 조선일보가 경제청문회에 서야하는 이유
8. 집중분석7 ● 조선일보 왜곡보도 국경도 없다
9. KBS가 방영미룬 조선일보문제들
10. 허위왜곡보도, 언론자유 꺾질쓰고 개인의 명예권 침해

#### <제2부> 역대 기사로 본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

#### <제3부> 崔章集教授에 대한

#### 조선일보사의 왜곡·음해보도 관련자료

1. 조선일보사의 이념음해 보도 내용
2. 조선일보의 왜곡날조 사례
3. 조선일보 보도 모니터
4. 관련 성명서
5. 관련기사
6. 기타 관련자료

#### <제4부>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를 발족

1. 국민에게 드리는 글
2. 월간조선 조감제 기자 - 안기부 커넥션 진상조사 요청서 및 성명서

## 발 간 사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경제위기로 명암이 엇갈린 채 시작됐던 98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자기반성없는 언론의 태도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선일보사가 있었다.

온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한 학자의 논문을 문 제삼아 불필요한 사상논쟁을 야기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인검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언론자유'역시 파시즘적 '자유'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조 선일보의 태도는 바로 자신들이 권력을 좌우하겠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 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일보사 발행 매체의 허위·왜곡보도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조 선일보의 보도가 한 개인의 인격모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시 민·사회운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IMF 위기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반개혁 세력인 조선일보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선일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누렸던 '일등신문'의 명예가 그 신문의 질과 반비례한 것임을 밝혀 내는 것도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본 자료집은 그 시작이다.

우리의 활동이 조선일보가 正論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99년 1월 4일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의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

문대골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경숙 (여성민우회 대표)

## 〈1부〉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1. 한 언론학자가 조선일보에 띄우는 글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집중분석1
  -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 위한 조약
3. 집중분석2
  -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10선
  - 이승복군 사건 조선일보의 작문기사 밝혀낸 김종배기자의 진실찾기
4. 집중분석3
  - 조선일보의 박정희 3선개헌/유신개헌 지지찬양 곡필사
5. 집중분석4
  - 조선일보의 전두환찬양 곡필사
6. 집중분석5
  - 조선일보의 노동·사회·인권 왜곡보도 7선
7. 집중분석6
  - 조선일보가 경제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
8. 집중분석7
  - 조선일보 왜곡보도 국경도 없다.
9. KBS가 방영 미룬 조선일보문제들
10. 허위왜곡보도, 언론자유 꺾질쓰고 개인의 명예권 침해

### 1. 검허한 반성만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지키는 일

KBS 개혁실천 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조선일보편」에 대해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사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주측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 소장 언론학자가 이런 움직임을 통렬히 논박하는 기고문을 보내 왔다.

김동민 (한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29일자 「조선노보」는 「KBS의 오류를 경계한다」는 기사에서 “우리는 KBS 제작팀이 선입견을 갖고 문제에 거꾸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단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일보를 프로그램의 한 테마로 선정한 것이나 미리 청산대상으로 지목해 놓고 부정적인 편린들을 추적해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노동자들을 위한 역사공부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영도 되기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언론인다운태도가 아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고 따라서 그러한 측면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선입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질 일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한 테마로 선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으며 조선일보가 끼친 부정적인 행태는 사소한 편린이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다.

「조선노보」는 또한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를 이런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음해성 비판에 대해 사원들의 명예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걸 거의 헐박이요 공갈이다. 언론민주화를 기치로 들고 출범했던 노동조합이 어찌 이리도 수준 이하의 얘기를 하는가?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떳떳한가? 한 발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역사공부를 한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하고도 떳떳하다면 KBS가 무어라 하건 상관하지 말고 국내 최대의 발행부수를 활용하여 조선일보를 홍보하는 것이 양식있는 태도라고 믿는다.

역사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한꺼풀만 벗겨보도록 하겠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친일 상공인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친일인사이거나 총독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조선인 신문을 허가하였다. 대정실업친목회는 총독부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곤란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다. 신문의 논조와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친일신문으로 대중에게 인식된 조선일보는 독자가

늘지않아 경영이 어려웠고 따라서 경영진이 자주 바뀌었다. 그러던 중 1932년 광산으로 벼락부자가 된 방응모씨가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29년 말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세우고서 문맹퇴치와 농촌계몽, 체육대회, 음악회 등 문화운동을 펼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접어두고 기업의 생존과 영향력의 확대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보급운동의 내면적 목적은 잠재적인 독자의 수를 늘리는 데 있었다.

이같은 문화운동에 대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이 통렬히 논박하였다. “강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1932년 1월에 터진 이봉창 의사의 일왕에 대한 폭탄투척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1월 10일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하였다.

천황폐하께옵서 특국관병식행으로부터 환행하시는 어료차에 노부가 맹전문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경위 사고가 발생하였다……전방 약 18간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어서 궁내대신 마차의 좌후부 차륜 부근에 떨어지어 차체 바닥에 엄지손가락 만한 손상 두셋을 나게 하였으나 어료거 기타에 이상이 없이 오전 11시 50분에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지 않은가. 이봉창이라는 흉악무도한 자가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폐하께서는 천만다행히도 무사하시었다니 조선일보는 조선의 신문이 맞는가? 지나사변 이후 일제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을 모집하기로 하자 조선일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조선인 청년들로 하여금 일군에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수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요컨대 금번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위정 당국에서 위로 일시동인의 성려를 봉체하고 아래로 반도민중의 애국열성을 보아서 내선일체의 대정신으로 종래 조선민중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병역의무의 제일단계를 실현케 하는 것이다. 황국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라.(1938년 6월 15일자)

차마 낮뜨거워 제정신으로는 읽을 수도 없는 내용이다. 일신의 안위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동포를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건 감추거나 지워 버릴 수 없는 엄연한 조선일보의 과거요 우리의 역사다. 조선일보는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수한 적이 거의 없다. 큰소리 칠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는 것은, 반성은 없고 오히려 막강한 매체력을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건너뛰어 1980년대로 와서 보자. 조선일보는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쥔 전두환씨를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되는 듯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찬양해마지 않았다. 피로 일룩진 정권에 없는 정통성을 조작해 바꿨다. 광주민중항쟁 때에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였다. 그 후 대통령선거 때에는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여당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여 킹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임 대통령들을 하이에나처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문공부의 '언론인 개별적추적 보고서'가 폭로되었다. 정부가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언론인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던 기록들이다. 이것을 보면 다른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은 문공부 관리의 주문을 경청하고 약간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한 발 앞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국에 대한 훈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몇 대목만 짚어 보자.

통민당 '통일정강' 문제에 대해 인보길 부국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함. "이 사건은 단적으로 김일성의 적화통일전략의 마수가 김영삼과 제1야당 내부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나는 이미 4-5일 전 편집회의에서도 통민당이 정강정책에 표방하고 있는 통일론이 김일성의 '남반부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전술의 뒷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1987년 5월15일 인보길 편집부국장과의 오찬)

국민운동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6 10대회와 관련 6월 10일자 조간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계도적인 편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조연홍 부장은 조선일보는 반공과 반폭력 혁명을 사시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4대지 중에서 조선이 가장 안정과 대화를 추구하는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함.(1987년 6월 9일 조연홍 사회부장, 고태용 차장 등과의



김윤환

허문도



최병렬

서정원



김종태

이도형



주돈식

조선일보가 배출한 정치인과 보수인사들. 방우영 회장은 조선일보 출신 관료와 정치인들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린 조선일보 사이기에 많은 인재를 키웠고 또 이런 선배들이 계셨기에 (조선일보가) 오늘의 위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오찬)

강상대 기지는 6월 11일 야근중 명동시위에 초강경 대처한다는 검 경 긴급회의 관련 기사를 취급함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넘어온 기사만 읽어서는 어느정도 비중을 두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제목을 만드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하면서 정책실(당시 문공부의 홍보정책실을 말함-필자 주)에 문의해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능숙인 진심을 토로하였음.(1987년 6월 13일 김진석 편집부장 등과의 만찬)

홍형강 차장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총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하며 김영삼이 당선되는 경우 장면정권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쿠데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1987년 11월 5일 김진석 편집부장, 홍형강 차장과의 오찬)

정권에 대한 아부와 야당에 대한 매도,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터무니없는 작문을 한 인보길 당시 부국장에 대해 접촉결과 보고서를 쓴 문공부 관리 박성수는 "온건하고 논리적으로 무장된 언론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노태우와 김영삼을 차례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차례로 물어뜯기를 반복했다. 조선일보는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과 술수를 부리더니 나중에는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작년 대선에서는 김대중씨를 떨어뜨리고 이회창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 지금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

이런 추악한 과거를 알고 접근하는데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반개혁 보수반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대중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곡필을 일삼고 있다. 「'정치'가 주무르는 빅딜」이라는 지난 6월 12일자 사설을 한번 보자.

"이런 판에 정당 총재가 나서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꼴이니 경제가 산으로 올라갈지 바다로 흘러갈지 극도의 혼미와 불확실성이 빚어지는 실정이다.....정치권이 구조조정의 참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빅딜만이 살 길이라고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칫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빅딜은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지금 구조조정이 경제논리에 의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한 표현이 아니다. 되지 않을 일을 된다고 우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날이 언제나 오겠는가? 나라가 정말 거덜나고 난 후에? 조선일보와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한 책임의 일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조선일보가 경제위기를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김대중의 사상을 의심해 온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전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같은 날짜 2면에는 「'대북제재 해제' DJ 진의 뭐였나」라는 제목에 「미 언론 "전면해제 요청을 클린턴이 거부"」라는 소제목이 붙은 기사가 실렸다. 내용에 비해 제목이 고약하기 짝이 없다. 독자들로 하여금 DJ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닐까?

조선일보는 과거고 현재고 부끄러운 기록이 훨씬 더 많다. 지금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와 편협함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명예를 지키는 일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한겨레 10월 23일



한겨레 10월 27일

## 2. 집중분석1 -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 위한 조약”

#### 월간 말 정지환 기자

조선일보가 반공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냉전시대의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돌려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병리적 심리의 근저에 자리한 뿌리를 발굴해 보자.

내선일체(內鮮一體) 구현으로 민족융합의 이상적 경지로 맥진(邁進) - 이는 모두 천황의 존엄스런 위세 때문인 동시에 팔괘일우(八紘一宇) 대건국정신(大建國精神)의 발로  
(「조광」 1940년 10월호 사설)

‘국가안보의 파수꾼’이자 ‘사상검증의 심판관’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자매지 『조광』(『월간 조선』의 전신)의 지면을 장식했던 기사의 일부다. 여기서 ‘맥진’이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돌진”을, ‘팔괘일우’는 “온 세상과 한 우주”를 뜻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세계를 위해 좌우를 돌보지 않고 돌진했던 조선일보의 친일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다.

조선일보과 『조광』의 친일기도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용기사는 가능한 원문을 살리되 일부는 현대문법에 맞게 고쳤다.)

#### 1. 일제침략에 항거한 민족항쟁을 테러로 매도

광주학생사건에서 발단이 된 학생시위사건이 전 조선에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 제군이 비상(非常)을 버리고 평상(平常)에 돌아와 고요한 책상 앞에 용기있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허다한 불만과 실망 속에 이토록 확대된 것은 학생들의 불행이자 조선의 불행이었다.

(1930년 1월12일자 사설 「동요 중의 학생제군 - 책상 앞으로 돌아가라」)

한국근대사의 ‘상식’은 광주학생사건을 청년학생들의 반일민족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학생들에게 배일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학원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한 의거를 ‘비정산적이고 불행한 일’로, 망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부나 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용기있는 일’로 본 것이다.

천황폐하께옵서 육군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앵전문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방 약 18간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어 궁내대신 마차의 좌후부 바퀴 부근에 떨어지어 차체 바닥에 엄지손가락 만한 손상 두셋을 나게 하였으나 천황의 마차에는 이상이 없어 오전 11시 50분에 무사히 궁성으로 돌아오시었다. 범인은…… 조선 경성생 이봉창 (32)

(1932년 1월 10일자 기사 「천황폐하 환행도중 돌연 폭탄을 투척」)

결국 요지는 이봉창이라는 한국인 출신 ‘범인(犯人)’의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천황폐하께옵서 천만 다행히도 무사하시었다는 말씀이다. (부끄럽게도 이 사건을 항일투쟁사건으로 특종 보도한 것은 중국의 「국민신보」였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운용을 잘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걷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

(1936년 12월 13일자 사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일보는 항일을 지향하는 독립운동과 사상운동을 말살하려는 이 악법의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총독부가 이 악법을 잘 활용하여 몰락의 길을 걷어가는 독립운동과 사상운동의 싹을 아예 밟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2. ‘황민화’ 기사로 ‘천황폐하’께 복종과 충성을 서약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1등기록을 남겼다. 조선신문으로는 최초로 새해 첫날 신문 1면에 일왕부부의 초상을 대문짝만하게 실기 시작했으며(1936년 1월 1일자), 가장 먼저 일본군은 ‘아군’ 혹은 ‘황군’으로 표기한 것이다(1937년 7월 19일자). 일본군의 침략 전쟁에 돈을 대라고 조선 동포들에게 강요한 ‘국방헌금’ 사고(社告)를 제일 먼저 낸 것도 조선일보였다(1937년 7월 19일자).

그런 조선일보였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조선의 민중’을 ‘천황의 신민(臣民)’으로 표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1937년 8월 23일자). 특히 ‘조선일보의 황제’인 일왕의 생일인 ‘명치절(明治節)’이나 ‘천장절(天長節)’이 되면 조선일보 지면은 ‘천황폐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감격으로 흥분의 도가니가 된다. ‘조선 침략의 괴수’ 히로히토의 생일을 맞이해 자칭 ‘민족지’ 조선일보가 지어 바친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시작된다.

춘풍(春風)이 태당하고 만화(萬花)가 방창(方暢)한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천장가절(天長佳節)을 맞이함은 억조신서(億兆臣庶)가 경축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바이다. 성상폐하께옵서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誠惶誠恐) 동경동하(同慶同賀)할 바이다. 일년일도 이 반가운 날을 맞이 할 때마다 우리는 흥원(鴻遠)한 은(恩)과 광대(廣大)한 인(仁)에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성봉공(赤誠奉公) 충(忠)과 (義)를 다하여 일념보국(一念報國)의 확고한 결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39년 4월 29일자 사설 「봉축 천장절」)

봉건왕조시대에 정도전이 이성계에 바친 헌사도 이보다 더하진 못했으리라. 조선일보는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항상 극존칭을 사용했다. 예컨대 ‘황공(惶恐)’을 ‘성황성공(誠惶誠恐)’으로, ‘경하(慶賀)’를 ‘동경동하(同慶同賀)’로, 충성(忠誠)을 ‘극충극성(克忠克誠)’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했다. 아니 조선일보는 신문 사설을 아예 교주에게 바치는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일왕을 ‘지존’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천황 지존’에게 “황공무지와 감격을 못 이기

졌다”고 토로한 뒤 이번에는 “신동아 건설의 성업을 수행하여 황도일본의 위광을 빛내지”면서 충성맹세를 늘어놓는다.

조선일보는 ‘조선 백성의 신문’이기를 포기하고 ‘일본천황의 신문’이 되기로 작정했다. 사실 말미에 “천황의 무강과 황실의 번영을 받들어 축하하면서 우리가 경행하는 이유를 강조하여 둔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러한 충성서약은 매년 되풀이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안 조선의 백성을 천황의 ‘신민(臣民)’이라고 한 것도 부족했던지, 이 무렵부터는 아예 ‘신자(臣子)’라고 바꾸어 표기했다는 점이다.

### 3. 내선일체 미화하고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 동원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1937년 8월 12일자 사설 「총후의 임무 - 조선군사후원연맹의 목적」)

1937년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즉각 조선 민중의 임전태세를 강조했다. 후방에서 조선 민중이 일본군을 지원 하는 것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당연히 발휘해야 하는 의무와 성의의 일환”이라고도 주장 했다.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된 1938년부터 조선일보의 ‘친일보국’과 ‘전쟁미화’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해 1월 1일자 1면에 일본군 지원병들의 열병식 사진을 ‘대문짝하게’ 게재한 조선 일보는 특집기사를 통해 당시 미나미 총독이 제창한 ‘내선일체’를 미화하는 일에 열중한다. 조선일보는 내선일체의 목적을 “조선 민중을 상대로 한 국민으로서의 신령상 의무, 권리의 동등성을 전제로 한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동족적 친화감을 깊게 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하고 “물론 이 실적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선 통치사의 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조선일보는 ‘에포크 메이킹’ 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했다)이자 미나미 총독의 일대 영단 정책 하에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것에 대하여 이미 본란에 수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가 있거와.....금번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당국에서 상(上)으로 일시동안의 성려를 봉채하고 하(下)로 반도민중의 애국열성을 보아서 내선일체의 대정신으로 종래 조선민중의 국민으로서의 의무.....황국신민화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라.....장래 국가의 간서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

일제는 1938년 4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만들어 냈다. 한국 청년들을 그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제도를 가리켜 ‘조선통치의 신기원’이라고 찬양했다. 아울러 전제에 나가는 것은 “천황과 일본의 신하이자 백성인 조선의 민중으로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갈충진성’이란 말은 섬뜩하기조차 하다. ‘갈진(竭盡)’은 ‘다하여 없어짐’이라는 뜻

이다. 결국 한국 청년들에게 천황과 일본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싸우다 죽으라는 말이 아닌가.

### 4. 조선일보 폐간 뒤 더 노골화된 친일매국의 길

조선일보는 친일행각에도 불구하고 1940년 8월 11일 폐간된다. “동아 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성취하는데 만의 일이라도 협력하고자 숙야분려(夙夜奮勵)한 것은 사회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고백한 폐간사의 한 대목처럼 조선일보가 무슨 항일을 해서 폐간된 것은 아니다.(‘숙야분려’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고민했다”는 의미인데, 결국 친일행각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자랑이다.) 이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가 월간지 『조광』(요즘의 『월간조선』을 연상하면 된다)을 확대 개편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국책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는 데 일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조광』 1940년 7월호 권두언 「일본제국과 천황에게—성은 속에 반복적 희열을 느끼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상태였다. 특히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은 방응모가 일제의 조선통치 30년을 맞이해서 쓴 다음의 글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능멸이고 배반이며 반역이었다.

일한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데라우찌 총독은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30년 동안 7대에 이르는 총독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색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 건설을 결실.....2천3백만 반도 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화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시려 깊은 시정(한일합방을 말함)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명하게 관찰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조광』 1940년 10월호)

#### 친일매국신문 조선일보 역사의 범정에 서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이 반민족적 친일행위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사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도리어 해방 후에는 이를 은폐한 채 민족지를 자처하면서 독재찬양의 길을 걸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친일파에 맞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세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진보세력을 ‘반공’의 이름으로 때려잡는 일이었다.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도 크게 보면 그런 친일콤플렉스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12월 13일 언론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현 회장)은 이 철의 원이 조선일보의 친일 전력을 언급하자 도리어 역정을 내며 이렇게 큰소리 쳤다.

“조선일보가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말이요? 악랄한 조선총독부 아래 선열들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고문당하고 피흘린 것을 매도하지 마시오. 그렇게 매도하면 우리 역사가 모두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오.”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을 비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자는 것이 역사를 매도하는 것이다? 조

선일보의 친일행각을 비판하면 한국의 역사가 모두 뒤집힌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알아야 한다. 프랑스가 항독 해방전쟁이 끝난 1945년 나찌 독일에 협력했던 매국노들과 반역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숙청시켰다는 사실을

실제로 프랑스는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지식을 팔아' 나찌를 도운 언론인들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친나찌 행위로 때론을 번 언론사 사장 알베르 르죈느와 친나찌 보도를 주도했던 언론사 주필 조르주 쉬아레즈 등 많은 언론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들이 썼던 시설과 기사가 사형선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 3. 집중분석2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반공'을 국시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독재정권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했고 보수언론 역시 국가안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마녀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야말로 그런 언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는 "북한 관련 보도는 오보를 해도 괜찮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 나라의 사상검증을 책임진 '전사'처럼 수없이 현상을 왜곡, 과장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체제도 수호하고 신문도 팔자'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 1. 이승복 어린이 사건 관련 보도(68년 12월 11일자)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일보 기자의 작문이었다

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3면에 실린 <“共産黨(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抗拒(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는 '안보상업주의 원조' 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 이라고 취재원을 밝힌 뒤 "열 살 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임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당시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조간신문들은 사실을 통해 공비의 만행을 맹렬히 비난, '이승복 신화' 만들기를 거들었다. 그러나 정작 이 신문들의 자체 취재 기사에는 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외마디나 항거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신문들이 이 보도를 인용했는데도 특종보도한 조선일보가 후속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보도가 오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당시 취재원으로 밝혔던 장남 학관군(당시에는 승권군으로 불렸다)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는 승복군의 형으로서,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학관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학관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에서 장남의 이름을 '승원' 으로 오기한 것도 이 보도가 기자의 작문이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다.

물론 조선일보는 반공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작문을 하면 좀 어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발상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는 것은 소설가의 몫이지 언론인의 몫은 아니다.

#### 2. 금강산댐 평화의 댐 관련 보도(86년 10월 31일자)

### 집단적 광신주의 부추겨 세계적 웃음거리 제공

86년 10월 30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석간신문을 통해 처음 보도된 '금강 산댐' 관련 보도는 정부의 정보조작과 이에 적극 호응한 언론이 만들어 낸 대형오보로 유명하다. 조선일보는 10월 31일 이 건을 처음 보도했는데 '조국통일을 너까리는', '악마의 목적', '악마적 기도', '북괴', '무기화', '물의 남침' 등 어느 신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속하고 섬뜩한 용어로 반복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보도 첫날부터 '대응댐' 건설을 주장한 신문도 조선일보뿐이다. 10월 31일자 사설 <가공할 금강산댐,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적극적 대응책을>에서는 "예컨대, 휴전선으로 갈라진 북한강의 수로를 동해 쪽으로 역류시키기 위한 터널수로를 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거나 "댐을 건설하여 충분한 저수능력을 갖추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등 '대응댐' 건설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 '권고' 를 받아들인 듯 11월 26일 정부는 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이른바 '평화의 댐' 건설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한 장본인인 셈이다.

더욱이 평화의 댐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성금모금에 앞장섰던 각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당시 학계에서 주장한 "정부의 발표 중 댐 높이나 저수량은 과학성과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발전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 이라는 문제제기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12월 25일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를 통해 남한측에서 주장하는 수공위협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보도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정부의 조작을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3. 김일성 사망설 관련 보도(86년 11월 16일~19일자)

#### '세계적 오보' 제조비법 — 북한 관련 보도는 오보해도 좋다?

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으로 보도한 '김일성 피살설' 은 18일 김일성 주석이 몽고 주석 영접을 위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틀만에 오보로 확인되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는 11월 16일자에서 "북한 김일성이 암살됐다는 소문이 15일 나돌아 동경 외교가를 한동안 긴장시켰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휴간일인 17일 호외까지 발행했다. 18일에는 총 12면 중 7개 면에 걸쳐 사망배경, 국내외 반응, 자사의 특종에 대한 자화자찬 등을 대서특필했으며 이 날부터 다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발표나, 확인된 정보가 없으므로 분명해질 때까지 추측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성의 브리핑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단신으로 처리, 무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보로 판명된 후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한국 대외신뢰 실추기도 국민불신 조장 등 노린 듯>이라며 모든 책임을 북측에 떠넘겼다. 특히 "그들 수령의 죽음까지 고의로 유포하면서 그 무엇을 노리는 북괴의 작태에 서방언론들은 정말 놀라고

있다.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알린 셈이 되었다" 는 신용석 외신부장의 '적반하장' 격 주장은 조선일보의 후안무치를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 4. '서울 불바다' 발언 관련 보도(94년 3월)

#### 선제기습론 제기하며 전쟁위기 부추긴 자칭 민족지

94년 3월 북 미 핵협상 당시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등 일련의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이를 '전쟁선언' 이라고 규정하면서 3월 19일 열린 특사교환 실무 접촉에서 강경발언을 했다. 물론 이 날 북측 대표의 발언이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전후관계를 거두절미한 채 '서울 불바다' 라는 표현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보도는 마치 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남북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다. 특히 3월 22일자 사설 <정부에도 문책한다>에서는 "동맹관계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는 정부의 입장을 아파 추어적이라고 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4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는 불분명한 취재원(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인의 발언과 신화통신 기사)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고 전쟁지도를 지급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월간조선>은 더욱 강경했다. 94년 3월호에서 조갑제 기사는 "북한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선제기습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민족지' 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민족' 의 안위보다 신문의 '실리' 를 우선한다는 상업주의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 5. 김일성 사망 조문논쟁 관련 보도(94년 7월 9일 이후)

#### "조문 용의 없다" 를 "조문 주장" 으로 해석한 의도

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선정성과 냉전이테올로기를 가장 심하게 드러낸 신문은 역시 조선일보 였다. 조선일보의 선정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김정일 비서에 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결벽증이 심하고 잔인" 이라거나 " '난쟁이 똥자루' 스스로 비하" (7월 12일) 등 공식적인 매체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 독살 가능성' 을 주장하고, <부검 왜 했나, 의혹 무성>(7월 11일), <홍콩 관측통 '자연사 위장 타살' 주장>(7월 13일) 등 사망경위에 대한 온갖 추측보도를 남발해 조선일보는 다시 오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한편 김 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첫 번째 마녀사냥은 이른바 '조문논쟁' 으로 시작되었다. 7월 11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한 이부영 의원의 "조문단 파견용의 없다" 라는 대정부

질문이 발단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조문사절 운운', '조문 주장' 등으로 표현하며 이 의원의 발언을 왜곡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7월 20일자 시론 <호지명이 죽었을 때>에서 '친북세력 추방'을 문민정부에 요구하며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키는 일에 정부도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 6. 박 홍 주사파 발언 관련 보도(94년 7월 19일 이후)

### 대한민국 검찰은 안 믿어도 박 홍 총장은 믿겠다?

김 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두 번째 '마녀사냥'은 박 홍 전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보도로 시작되었다. 94년 7월 18일 청와대 오찬에서 당시 서강대 박 홍 총장은 "대학 내에 주사파가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노맹과 사로청의 차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함을 드러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들은 다음날 이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의 '박 홍 총장 키워 주기'는 민망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7월 21일 <박 홍 총장의 용기……사회가 보호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지식인들의 박 홍 총장 지지를 대서특필했다. 반면 같은 날 시론 <끌려 다니는 지식인, 뒷북만 치는 정부, 주사파의 천국—한국대학>에서는 박 홍 총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용기없는 지식인이라고 되는 듯이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박 홍 총장 발언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주사파"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총장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그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박 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그의 '북한장학금' 발언으로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사파 발언으로 박 홍 총장은 97년 5월 12일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박 홍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했던 조선일보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 7. 성혜림 망명설 관련 보도(96년 2월 13일 이후)

### 한국언론 오보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적 오보'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이라고 자랑한 <김정일 본처 서방탈출> 보도는 5개월여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기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안기부 당국자에 의하면 성혜림이 애초 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취재내용을 토대로 96년 2월 13일부터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본처가 망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후처들이 괴롭혀 결행>(2월 13일 3면), <김정일 여성편력에 가슴앓이>(2월 14일 2면)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망명의 근거를 설명했다. 더

욱이 조선일보는 "엄마 보러 모스크바로 갈게요" (2월 13일), "오지 마, 나 지금 무슨 계획있어", "평양에는 안 들어가……나 갈데 있어" (2월 14일) 등의 표현으로 마치 망명 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긴박하고 현장감 있게 기사를 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등 상업적인 접근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2월 17일자에서는 <무너지는 북한……정치권 공안통들의 분석>이라 하며 이를 북한붕괴론으로 이어갔다.

'성혜림 망명' 오보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한국언론사의 오보란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 8. 황장엽 망명 관련 오보(97년 4월)

### 김현철 비리사건을 한방에 잠재운 황장엽 특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과 관련 조선일보는 "평화통일 위해 몸바치겠다" (97년 4월 21일자)는 한 탈북자의 의지를 안보상업주의에 악용했다.

조선일보는 4월 22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황씨 논문 <조선문제> 단독입수"라고 밝힌 뒤 <북 핵 화학 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긴 제목을 먹것으로 뽑았다. 또한 조선일보가 뽑아 놓은 <무력통일 의심하면 머저리 중 상머저리>, <개방유도맨 오히려 우환……붕괴시켜야> 등의 제목을 보면 황씨가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망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이 논문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해외언론은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4월 23일 한국발로 황씨가 내밀한 군사정보를 알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조선일보가 어떤 경위로 논문을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당시 황장엽씨 보도로 인해 김현철씨의 비리보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황장엽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 내 친북세력 색출 시사>, <권 부총리 "황씨가 알고 있을 것">(4월 23일자)이라며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황장엽 리스트는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치권은 물론 국제엠네스티도 '황장엽 리스트 악용 반대'의 입장을 폈다.(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25일자) 결국 조선일보는 '주사파 리스트'에서 범한 우를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이다.

## 9.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 관련 보도(97년 8월)

### 이성적 논의 원천봉쇄한 색깔선동의 노림수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은 색깔론을 앞세운 언론의 무차별 공세 앞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해 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석현 의원은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아랍어, 중국어 등 7개 국어로 명함을 제작했고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어로는 서울(한성), 중국어로는 한국(남조선)을 나란히 써 놓았다고 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남조선이란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8월 20일자 사회면에서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제목을 뽑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같은 날 사설 <남조선 국회의원>에서도 “국회는 마땅히 이런 무자격 의원의 제명도 불사하는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마녀사냥을 선동했다. 사안의 본질이나 당사자의 의도, 행적 등에 대한 설명없이 여론을 오도하고 감정적인 단죄를 내린 것이다. 이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간 뒤 기사와 사설을 쓴 기자와 논설위원에게 전후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들도 잘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서 출신이었던 이 의원은 다음날부터 ‘빨갱이 의원’으로 낙인찍혀야 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석현 의원의 명함파동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주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사회의 이성적 논의를 원천봉쇄한 조선일보의 한 인간에 대한 전횡은 희비극과도 같은 한국분단사의 일그러진 편린이다.

## 10. ‘양심수 사면’, ‘전향제 폐지’ 관련 보도(97년 12월/98년 7월)

### 이회창이 하면 인권옹호고 김대중이 하면 옹공발언?

15대 대선을 앞둔 97년 10월 31일 광주 TV토론에서 김대중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포문을 열었다. 11월 1일자 1면에 <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검찰 안기부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한 데 이어 11월 2일 <양심수 사면 파문 확산……공안사법 사법판단 부정할 셈>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조선일보는 11월 2일 <디제이 양심수론>과 6일의 <양심수 재론> 등 연속적인 사설을 통해 “양심수 논란에 전국민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의 관용(?)을 베풀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11월 2일 평화방송 대담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차별적인(?) 보도를 한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던 셈이다.

최근 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데 그 어떤 역작용과 부작용을 끼치지 않는겠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양심수 몇 명이 사면된다고 해서 현 체제가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도리어 그런 즉자적 접근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꺾으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에서 드러난 ‘국가안보상업주의’ 경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을 내부

에서부터 합리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실천하는 긍정적 방식을 통할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조선일보가 민족대단결과 민족제약의 깃발 아래 21세기를 향해 힘겨운 길을 떠나야 하는 7천만 겨레의 벗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 70%의 국민들에게 “입 다물라” 호통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난 7월 1일 「만물상」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일각에는 최근 남북간에 ‘금강산 관광’ 합의가 이뤄지며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봄이 온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글의 말미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지 않겠는데……”라는 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 ‘착각’ 사례 중 하나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어느 인사는 소련이 사라진 지금, 첨단 장비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간첩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는 대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가 ‘어느 인사’가 누구인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한겨레신문 6월 27일자 <더불어 생각하며>에 글을 쓴 손장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안기부 2차장)을 가리킨 듯하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라는 글에는 실제로 “특히 남한처럼 미국의 인공위성 등 과학적 정보수집 수단의 긴밀한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북한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거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상대방에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각종 침투와 도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는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글 전체를 읽어보면 손씨가 잠수정 침투사건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서냉전이 극심하던 60년 미국의 U-2 첩보기가 옛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어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과했던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나라든 불가피하게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잠수정 침투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정주영 회장의 소물이 반복으로 성사된 금강산 관광이라는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손씨의 글 중에서, 조선일보가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표현한, 그래서 조선일보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북의 행동과정을 놓고 북의 ‘이중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화해와 통일은 한두 가지의 성과나 사건으로 이뤄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백 수천만 장의 벽돌을 하나하나 꾸준히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본다. 어떤 단편적인 사건, 대응, 대응조치 등에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라……” 안기부 2차장이라면 해외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의견을 ‘착각’이라고 간단하게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행위와 관련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즉 ‘무력도발’과 ‘시체’라는 용어가 적절한



데도 정부가 '침투도발'과 '시신'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 수익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지 나 않겠는데”라는 독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어찌 보면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 ‘시신’이니 ‘시체’니 하는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말이다. 정부에 신중한 용어 사용을 촉구했던 조선일보가 스스로의 용어 선택에서는 이렇듯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4일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다. 7월 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이 훨씬 넘는 5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던 바로 그 날 조선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의견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 조선일보의 '작문기사' 밝혀낸 김종배 기자의 진실찾기 - "68년 12월 10일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에 없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군의 이야기를 보도했던 30년전의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기사’라는 사실을 현장취재를 통해 밝혀 낸 김종배 기자. 그는 6년전 이승복군의 형이자 사건 현장의 유일한 증인 학관씨의 증언을 통해, 그 동안 언론계에 떠돌던 이 ‘공개된 비밀’이 ‘객관적 사실’임을 확인했다. 덕분에 최근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됐던 그의 취재후기를 실는다.

김종배/미디어오늘 기자

### 조선일보는 언론의 정도를 견고 있는가.

‘이승복군 오보논쟁’을 대하는 조선일보에 던지는 질문이다. 30년전의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기사’라는 사실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필자는 조선일보가 정도를 걸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물론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가 작문이나 오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언론사는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언론사의 기본책무가 사실보도에 있는만큼 작문이나 오보라는 지적은 해당 언론사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외국의 선진적인 언론들은 자사의 보도가 오보시비에 휘말릴 경우 철저한 사실조사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거나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곤 하는 것이다. 더이상의 명예실추를 방지하기 위해서.

### 내가 이학관씨 인터뷰 녹음테이프 보관한 이유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대승적 자세는 아예 뒤로 제껴둔 채 소아적 태도로 일관했다. 취재와 보도의 원칙이나 기본마저 소홀히 하며 상대방 혈투기에 열성을 쏟았다. 덕분에 필자는 조선일보 사설에 의해 ‘국가 총노선을 뒤흔드는’ 불순분자로 매도됐으며, 좌익친북한 인사로 낙인찍혀 버렸다. 조선일보의 이런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승복 오보논쟁’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되었다. 조선일보가 지면을 ‘도배’하고 {월간조선}과 {주간조선} 등 자매지까지 동원해 총공격을 퍼붓고 난 이후에도 필자는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실’이나 주장 그 어느 것에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취재와 보도의 정도를 벗어난 조선일보의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한 ‘언론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6년전 대관령을 넘어가 승복군의 형 학관씨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리고 몇 차례의 보강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탈고했을 때, 필자는 {저널리즘} 92년 가을호에 실린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란 기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취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문을 마저 해소하지 못한 채 기사를 탈고해야 했던 아쉬움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언젠가는 재취재를 하겠노라고 되뇌곤 했었기 때문이다. 9월 22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학관씨와의 인터뷰 녹음테이프를 필자가 계속 보관했던 것도 이런 소회에 따른 것이었다.

{저널리즘} 기사를 탈고하면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단 한가지 사실은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기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확신 뒤에 옹당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한가지 의문, 즉 "그럼 어떻게 작문기사가 '사실'과 일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필자는 마저 풀지 못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형 학관씨가 승복군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한 '작문기사'와 '사실'간의 함수관계는 고차원 방정식만큼이나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자는 {저널리즘} 기사 말미에 이런 구절을 남겨 두었다.

"냉전의 잔영을 깨고자 기세 좋게 나선 작업은 일단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유물청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떨떠름한 자평을 위안 삼으며."

'실마리'란 표현은 조선일보의 작문 사실을 일컫는 것이었고, '불합격 판정'은 그것과 '사실'과의 풀리지 않는 함수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런 자평마저도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필자의 이런 심경은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가 '이승복 보도'의 오보 여부를 재취재하고 있다는 소식과 뒤섞이면서 우려와 기대로 바뀌었다. 행여 6년전 {저널리즘}기사가 오보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우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좀더 가까이 가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겠다는 기대가 교차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마저 느껴야 했다. 논란의 당사자로서 가급적 말을 아껴야 하는 필자가 왜 이런 혹평을 내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혀야겠다.

### 사실규명 피한 채 이념논쟁으로 국면전환 시도

조선일보가 본지는 물론이고 『월간조선』, 『주간조선』 등의 자매지까지 총동원해 제시한 '핵심사실'은 단 한가지다. 사건 당시 학관씨로부터 승복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최순욱·서옥자씨의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증언을 토대로 한 가지 등식을 만들어 냈다. "사건 당시 승복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증인이 있다. 그러므로 승복군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라 특종이다." 논란의 전후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독자들이 듣기에는 꽤 설득력이 있는 등식이지만 여기엔 교묘한 함정이 깔려 있다.

조선일보가 지목한 논란의 당사자 중 그 누구도 승복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언한 이는 없다. 다만 그런 말을 전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현장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기사라는 사실만을 폭로했을 뿐이다. 물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작문기사와 승복군의 발언간의 함수관계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문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즉 조선일보의 작문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다음 취재로 넘어가야 하는 게 순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조선일보의 작문 사실만을 가지고

승복군의 발언은거짓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조선일보의 '노림수'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논란이 됐던 것은 '승복군의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뒤바꾸어 버렸다. 그리곤 무차별 이념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9월 21일자 사설 ["이승복신화는 진실이었다"]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작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된 반공의 날조극이었다'는 말이 진짜 '진실'로서 통용되어 굳어지는 한, 북한 무장공비의 일가족 5명 학살만행과 '남조선 적화혁명' 기도에 대한 세인의 일차적인 관심은 묘하게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작문 사실을 제기한 사람들을 '조작론자'라고, 그런 '기도'를 "국가총노선과 관련된 언술의 혼란"이라고 비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9월 28일자 3면에 실린 [기자수첩-누가 왜 '매도'하나]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서 우리 땅에 침투한 무장공비가 순진무구한 어린이와 무고한 양민을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조선일보 오보논란'을 통해 집요하게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양민학살이란 사건 성격까지 희석시키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주장함으로써 필자를 포함해 조선일보의 작문 사실을 제기한 사람들을 마치 '빨갱이'인 양내몰았다.

조선일보의 이런 '이미지 조작'은 꽤 효력이 있었던 것 같다. 사설과 [기자수첩]이 게재되고 난 후 독자투고란에는 조선일보가 명명한 '조작론자'들을 규탄하는 글들이 실린 것이다.

### 민언연 간사·MBC PD와의 인터뷰 왜곡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사실에 사실로 답하는 정도를 버리고 이미지 조작이란 쉬운 길을 택했다. 이미지 조작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고 마녀사냥하듯 상대방을 두들겨 팼다. 물론 이런 '꼼수'가 약효를 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발행 부수 2백만 부라는 실제적 힘이 작용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조선일보가 택한 것은 이미지 조작만이 아니었다.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9월 28일자 조선일보를 본 독자들은 '이승복 보도' 논란에서 조선일보가 '완승'할 것임을 예감했음직 하다.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가 작문기사임을 확인해 최초로 활자화한 당사자인 필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날자 3면에 실린 ['조작설' 첫 제기 김종배씨]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보자.

- 지금도 김 차장이 쓴 기사를 확신하는가.

"얼마전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세상에 완벽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 글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려야겠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의 부제로 [내가 내 글에 '불합격 판정' 내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필자는 조선일보 기자 앞에서 {저널리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꼴이 된다. 이 때문인지 같은 날짜 같은 면에 실린 ['공산당이 싫어요' 진상]이란 기사에서는 "김종배씨에게 물었다. 그는 '그래서 내 글에 대해 불합격판정을 내려야겠다'고 쓰지 않았느냐고 물러섰다"라고 못박아 버렸다. 최초로 조선일보의 작문사실을 제기한 당사자가 한발 물러서 버렸으니 '이승복 보도' 논란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조선일보는 필자와의 인터뷰 내용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터뷰마저 왜곡해 버렸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이유경 간사, 그리고 [PD수첩]을 제작했던 이용석 PD의 말마저 왜곡해 버린 것이다. 민언련의 이유경 간사는 조선일보가 "승복군이 공산당이 싫다고 말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PD도 조선일보가 자신의 말을 인용해 "학관씨의 말을 '주장'으로서만 인정할 뿐 100%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자신의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는 자사 보도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조차 왜곡하거나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실은 것이다. 참고로 조선일보가 9월 28일자에서 승복군 마을 주민의 말을 빌어 상대방을 비판한 기사의 부제를 소개해야겠다. 그 부제는 이런 것이었다. ["내 증언 앞뒤 잘라 오보 증거로 몰아" 주민 분통].

앞서 필자가 '이승복 보도' 논란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소아적이라고 혹평한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동원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집단의 선전부대에서나 써먹을직한 이미지 조작을 언론기관이 버젓이 사용했다는 점은 아마도 두고두고 조선일보의 치부로 기록될 것이다.

## 다른 건 다 생생한데 취재원만 생각 안 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자. 조선일보가 비틀어 버린 논란의 핵심쟁점, 즉 조선일보의 작문 여부에 주목한다면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실'들이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눈치채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밝혀 낸 사실은 당시 학관씨로부터 승복군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두 증인의 회고담뿐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자사의 보도가 작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특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밟아야 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승복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일보가 내세운 두 증인의 회고담은 유력한 '증거'로서 평가되지 못한다.

이 난제를 조선일보는 어떻게 풀었는가. 전혀 풀지 못했다. 1면부터 4면까지 4개 지면을 할애해 대대적으로 다룬 9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지면 어느 구석에서도 '징검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조선일보는 1면 기사제목 ["공산당이 싫어요"나도 들었다]처럼 뒤바뀌 버린 쟁점에 의존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반박이 설득력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목을 ["공산당이 싫어요" 내가 전했다]로 달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제시했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수많은 보도 가운데 이 '징검다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월간조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실하다. {월간조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때문에 입이 찢어져 죽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최순옥씨에 의해 여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발설되었다……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당시 주변에 군인들과 예비군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얘기다."

그러나 이건 추정일 뿐이다. 추리소설에서도 용납치 않는 어설픈 열개일 뿐이다. 하물며 확인된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가 펼칠 주장은 아닌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징검다리'를 복원해야 할 당사자인 강인원씨(당시 기사 작성자, 현 대우통신 감사)마저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씨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사를 썼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의 취재수첩이라도 있다면 뒤져보겠지만 이마저도 없다고 했다. 30년이란 세월의 더께에 눌러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해할 법도 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공교로운 것은 같이 기억의 저편으로 스러져 갔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간조선} 기자에게 당시의 취재경위를 설명하면서 정황과 시간까지 정확히 제시하는 기억력과 취재원이 누구인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기억해 내지 못하는 기억력, 이 둘 사이의 부조화를 마냥 이해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증언의 신빙성 문제다. 조선일보가 내세운 증인들의 말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서로간의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다. 최순옥씨의 경우 [월간 조선]이나 PD수첩팀에게는 자신만이 학관씨가 전한 승복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있어 학관씨의 이야기를 들으려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옥씨는 [뉴스플러스] 기자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피난 온 30여명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을 반복했다.

최순옥씨가 증언을 반복한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승복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숫자는 강씨의 취재경위를 뒷받침하는 데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최씨 혼자 들었을 경우 강씨의 취재경로는 그만큼 좁아진다. 더욱이 최씨는 PD수첩팀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그러나 30여명이 들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옥자씨의 증언도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온 학관씨로부터 승복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같이 최순옥씨의 집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씨의 이런 증언은 이학관씨나 최순옥씨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관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걸어 내려가 최순옥씨 집으로 갔다고 했다. 최순옥씨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학관씨 혼자 자기집에 찾아왔다고 했다. 이처럼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에 어떻게 무게를 둘 수 있겠는가.

### “조선일보 기자는 그날 평창이 아닌 강릉에 있었다”

‘부실보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취재와 보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크로스 체크(쌍방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단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중요한 취재대상을 제외해 버렸다.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가 작문이란 사실은 언론계에서 30년 동안 끈질기게 오갔던 정설 아닌 정설이었다. 그리고 이런 작문설을 제기한 이들은 다름 아니라 당시 사건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타사 기자들이었다. 자신들이 취재할 때 강인원씨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승복군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터에 조선일보에 버젓이 승복군 이야기가 나오니 어리둥절해 했고 이 때문에 재취재를 해보았으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기에 ‘작문’이라고 단정내린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언론사답게 사실에 충실한 재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 타사 기자를 상대로 면밀한 취재를 했어야 당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들을 ‘형편없는 인간’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손쉬운, 그러나 비접한 방식을 택했다. 조선일보는 사보에 실린 강인원씨 인터뷰를 통해 타사 기자들이 제기한 작문설에 대해 ‘물먹은 기자들의 마타도어’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그리고 아예 취재할 생각조차 하지않았다.

그러나 타사 기자들의 증언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작문기사임을 입증하는 허다한 정황들이 문혀져 있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당시 강릉에서 군과 경찰을 집중취재했던 한 기자는 강인원씨가 사건 다음날인 12월 10일 오후 조선일보 지사에서 전화를 송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당일 취재를

마치고 대관령 인근 목장에서 송고했다는 강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당시의 강씨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또 하나의 증언이 있다. 12월 10일 오전 11시경 사건현장에 최초로 도착해 1시간 정도 취재했던 강한필씨(당시 경향신문 기자)는 이 과정에서 강씨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인원씨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은 오전 11시 30분경 이승복군 집에서 7~8km 떨어진 속사삼거리에 도착해 현장까지 뛰어갔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강한필씨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강인원씨는 취재하러 가는 중에 마주쳤어야 했다. 현장에 이르는 길은 외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둘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규명키 위해 당시 발간된 신문을 뒤져보았더니 최소한 강한필씨의 주장에서는 ‘거짓’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승복군 일가족의 피살소식을 12월 10일자 2판에 내보냈다. 조선일보보다 하루가 앞선 보도였다. 당시 석간이었던 경향신문의 2판 기사 마감은 오후1시경. 오전 11시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 정도의 취재를 마치고 인근의 황계우체국(현장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으로 달려가 송고했다는 강한필씨의 주장을 그대로 입증한 게 바로 경향신문 기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증언은 다른 데 있다. 지금부터 20여년 전쯤, 그러니까 문제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지 10여년 후 한 기자는 같은 출입처에 나가던 강인원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다음날인 12월 10일엔 현장에 가지 못해 전화로 취재를 해 기사를 보냈으며 현장은 다음날인 12월 11일에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 증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강인원씨가 현장에 가지 않고, 따라서 마을주민들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을 만나 보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인원씨는 어떤神通력을 가졌기에 현장에 가지도 않고, 증언을 듣지도 않고 ‘사실’에 부합되는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 조선 기사가 현장 안가고 기사 쓴 결정적 근거

마지막으로 당시의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면밀히 살펴야겠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승복군의 이야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른 사실들을 소홀히 해 온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968년 12월 11일자에 실린 문제의 기사는,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승복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제외하고 모두 8가지의 사실로 구성돼 있다(당시 조선일보 기사 전문과 <도표 1> 참조).

조선일보가 제시한 8가지의 사실 가운데 학관씨나 마을주민의 증언과 부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승복군이 외마디 절규를 했다는 내용 말고는 그 무엇 하나 사실에 부합하는 게 없는 것이다.

당시 사건현장에 가서 수십명의 타사 기자들은 단 한번도 들을 수 없었던 승복군의 이야기까지 취재할 정도로 정교한 취재력을 가진 강씨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실수’이기보다는 현장취재를 하지 않은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 아닐까. 그 해답의 실마리

〈표1〉 조선일보 기사의 오보 내용

조선일보 기사	이화관씨(일부는 마을 주민)의 증언
취재원이 화관씨(기사에서는 승원군)임.	화관씨는 사건 직후 기자를 만난 적이 없음
공비들이 어머니 주대하씨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강냉이를 삶으라"고 요구했다.	공비들이 방에 들어와 메주를 만들기 위해 삶아 놓은 콩을 먹었다
공비들이 가족 5명을 모아놓고 복괴선전을 했다.	공비가 승복군의 노트와 연필을 보고 "어디서 난 것인가"라고 물은 뒤 "북한이 좋은가 남한이 좋은가"라고 물었다
가족들을 모두 방에서 10m 떨어진 퇴비더미로 데려가 죽였다.	화관씨를 제외하곤 모두 방안에서 죽었다
승복군의 입 속에 양손가락을 넣어 찢고 돌로 내리쳐 죽였다.	공비들이 승복의 입 속에 대검을 넣어 찢는 것만 봤다
아버지 이석우씨는 채모씨집 이삿짐을 날라 주러 갔다.	채모씨가 아니라 강환기씨 집이다
이씨가 2km 떨어진 향군 초소에 신고했다.	이씨는 강환기씨의 집에 머물러 있었음
퇴비더미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고 화관씨를 구해 냈다.	화관씨 스스로 걸어 내려왔다

출처 『미디어오늘』 10월 7일자 인용

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자리한다. 강인원씨는 문제의 기사에서 공비들이 승복군 일가족을 집에서 10m 떨어진 퇴비더미로 끌고가 죽였다고 써 놓았다. 그러나 실제의 살해 현장은 바로 방안이었다. 어머니 주대하씨를 비롯해 승복군 남매 등 4명이 모두 방안에서 피살됐으며 이로 인해 방안은 피범벅이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의 타사 보도뿐

아니라 문제의 기사가 실린 다음날인 12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진기사도 입증하는 바다. 그런데도 강인원씨는 살해장소가 집밖 퇴비더미였다고 밝혔다. 사건현장을 둘러봤다면, 그래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선홍색 방안을 한 번만이라도 둘러봤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 이념공세로 판전 피우지 말고 사실규명 나서야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조선일보는 최근의 논란과정에서 왜 '국가총노선'을 뒤흔드냐고 욕박질렀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과연 조선일보가 외치는 '국가총노선'이란 게 뭐냐고. 필자의 알은 식견으로는 '국가 총노선'이란 국민적 합의가 밑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실천치침이 동반되는 총노선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는 진실된 정보의 공개를 필수적 선결조건으로 요구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지금 해야 할 책무는 간명해진다. 이념공세를 퍼붓기에 앞서 사실의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과연 조선일보 기사는 작문인지 특종인지, 더 나아가 승복군의 외마디 절규는 진실인지 상상력의 산물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지금 조선일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책무라는 점이다. 언론사에게 부여된 책무는 사실의 탐구를 통한 진실의 발견이지 이념을 앞세운 욕박지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한다. 그 나머지는 국민 스스로의 판단

에 맡기면 될 일이다.

### 【조선일보 68년 12월 11일자 기사 전문】

〔○○기지에서 강인원·송종현 기자〕 최후발악하는 잔비는 또 외딴집에 침입, 약탈행위를 감행한 후 복괴선전을 하려다가 열살짜리 꼬마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고 하자 돌맹이로 어린이의 입을 찌는 등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죽이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9일 밤 11시쯤 평창군 ○○면 ○○리 이석우(35)씨집에 잔비 5명이 침입, 이씨의 부인 주대화(33), 2남 승복(10)군, 3남 승수(7)군, 3년 승녀(4)양을 죽이고 이씨와 장남 승원(15)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후 닭 3마리, 옥수수, 쌀 등을 약탈 도주했다.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 공비들은 이날밤 가족들이 저녁밥을 먹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공비들은 부인 주여인의 이마에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밥을 지으라"고 위협했다. 주여인이 "쌀이 없다"고 거절하자 "강냉이를 삶으라"고 재차 요구, 어린이들은 3명의 공비들에게 둘러싸여 감금됐고, 주여인은 공비 2명의 총부리를 받으면서 부엌에서 강냉이를 삶았다. 이때 주인 이씨는 아랫마을 채모씨 집에 이삿짐을 날라주느라 집을 비우고 있었다.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 넣은 다음 복괴의 선전을 했다. 열살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그 중 1명이 승복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계속해서 주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m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맹이로 어머니 주여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 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 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나머지 세 어린이도 돌로 짓이겨 죽인 다음 퇴비더미를 덮었는데 장남 승원군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아 살아났다. 주인 이씨가 아랫마을에서 올라왔을 때 공비 2명이 토방에 걸터앉아 있었고 다른 3명은 집안을 온통 뒤지고 있었다.

공비 2명은 식구들이 보이지 않아 의심을 한 이씨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1명은 총을 겨누고 1명은 이씨를 쓰러뜨린 후 배위에 올라앉아 칼을 뽑으려 했다. 이씨는 발버둥으로 1명을 밀어내고는 재빨리 부엌문을 통해 내리막길로 뛰었다. 이씨는 방문을 내딛는 순간 공비의 칼에 엉덩이를 찔렸다. 2km 떨어진 향군초소에 이씨가 신고, 군경예비군 합동수색대는 이씨를 앞세우고 현장에 도착했다. 공비들은 도망친 후였고 퇴비더미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숨이 끊기지 않은 장남 승원군을 구해냈으며 무참히 살해된 시체 4구를 발견한 것이다. 퇴비더미는 피로 흥건히 물들어 있었다. 이씨와 승원군은 원주육군병원에 후송, 가료중이며 아군수색대는 이씨집 뒤 ○○산 일대를 완전포위, 수색전을 벌이고 있다.

에 응덩이를 찢었다. 2km 떨어진 향군초소에 이씨가 신고, 군경예비군 합동수색대는 이씨를 앞세우고 현장에 도착했다. 공비들은 도망친 후였고 퇴비더미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숨이 끊기지 않은 장남 승원군을 구해냈으며 무참히 살해된 시체 4구를 발견한 것이다. 퇴비더미는 피로 흥건히 물들어 있었다. 이씨와 승원군은 원주육군병원에 후송, 가료중이며 아군수색대는 이씨집 뒤 ○○산 일대를 완전포위, 수색전을 벌이고 있다.



#### 4. 집중기획3-조선일보의 박정희3선개헌/ 유신개헌 지지찬양 곡필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 '체육관 대통령' 뽑으려고 선포한 계엄령도 '구국의 영단'

박정희 정권 18년. 경제개발과 민주파괴라는 양극단의 담론으로 상징되는 박정희정권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조장하는 요란한 미화작업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장기집권에 협조한 대가로 사익을 챙기고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의 '박정희 되살리기'에서는 역겨움마저 느껴진다.

##### 1. 69년 3선개헌 관련 보도

###### 국민투표 앞두고 각계인사 동원해 박정희 업적 찬양

3선개헌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다. 조선일보는 초기에는 개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찬반양론을 기계적 균형으로 기사화하기에 이르렀고 개헌 직전과 직후에는 노골적인 개헌 지지로 기울었다. 3선개헌이 있었던 해인 69년 1월 11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정부와 국민의 거리감을 단축시킨 의의]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헌법은 국가기본법이니만큼 그때 그때의 집권형편에 따라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의 형편이 꼭 필요하다면 고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러한 논조는 일단 개헌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명백한 반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헌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열어 주었다는 분석이 더 타당할 것이다.

###### 개헌논의 '불씨 살리기' 안간힘?

특히 조선일보는 "그 '필요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이 대다수 국민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한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대다수 국민에 의한 인정'이라는 조건으로 개헌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은 결국 개헌 합리화의 길을 터 주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개헌안 국민투표 다음날인 10월 18일 1면에서 조선일보는 [국민투표 : '개헌찬성' 압도적]으로 크게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사설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 - 다수결에의 복종과 함께 소수파도 존중]에서도 "올해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개헌문제가 이렇듯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결말을 짓게 된 이상 비록 치열한 반대세력이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이제는 다수결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도리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하고 나

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복해 있던 개헌론은 69년 5월 초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의 회견을 시발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시 윤 의장서리의 발언은 박정희정권이 측근을 통해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5월 9일자 1면에 [개헌론-그 부침과 향방/길 트인 '사건' - 여야논쟁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여당 인사가 던진 '불씨'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객관적인 보도'라는 명분 하에 개헌논의에 대한 '불지피기'에 나섰다. 지면에 찬반양론을 동등하게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헌론의 본질에 대한 정면비판은 회피한 채 '객관적인 형식'을 빌린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오히려 "여론추이 따라 개헌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윤 의장서리의 발언에 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일보가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었다. 5월9일자 사설 [부질없는 '개헌' 논의]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개헌운운의 시기가 아니라"며 "절대적인 필요성과 거론해도 좋을 시기가 도달했다고 공화당이 판단했을 때 개헌논의의 정도를 걸어 국민의 활발한 비판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입장은 무엇보다도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9월 14일자 사설 [개헌안의 변칙통과]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하루 이틀 표결을 연기하여 질서 있는 표결을 위해 야당과 협상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국가대사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개헌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 사설은 절차상의 문제로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어쨌든 개헌안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 표결방법의 유무효는 별도로 치고 실은 이제부터가 더 큰 고비인 것이다"라며 결국 날치기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여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민투표에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 10월 9일자 사설 [국민투표 실시의 공고]에서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민주주의식만 건전하다면 그렇게 심각할 것 없건만" "우리 민도(民度)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자" 등의 표현을 통해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면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훌륭한 영도자를 중심으로"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개헌지지로 돌아선 상태였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후 보도와 논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69년 10월 16일자에 게재한 [‘영광의 후퇴’보다 ‘전진의 십자가’를……]나는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 번 더]라는 낯뜨거운 제목의 기사는 그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선을 끄는 부분은 [각계인사들이 본 ‘성장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선일보가 선택한 11명의 '각계인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언했다.

"건설 중단은 혼란만 초래"(곽복산/중앙대 교수) "안보 위해 정치적 안정을"(박일경/헌법학자) "정국의 안정이 제일조건"(심상준/제동산업 사장) "대외적으론 국위선양"(이한원/대한제분 사장) "부정 시인은 올바른 자세"(김동익/동국대 총장) "지속적 발전엔 안정이 필요"(민병구/서울상대 학장)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김용관/서울치대 교수) "보다 잘 사는 내일을 위해"(신영균/영화 배우) "훌륭한 영도자를 중심으로"(최은희/영화배우)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었다"(안은숙/영화배

우) "강력한 영도력의 지속을"(강부자/텔런트). 개헌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의견만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사가 국민투표를 앞둔 시점에 게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각계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권유한 셈이다.

## 2. 72년 유신개헌 관련 보도

### 계엄령도, 언론검열도,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좋다?

유신시대로 접어들 무렵부터 조선일보는 그간 표면적으로나마 내세우던 양비론을 거둬들이고 노골적인 지지와 찬양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회해산과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대학가 휴교와 언론#출판#방송의 사전검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유린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당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를 이용해 박 정권은 "너무나 갑작스러워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조선일보 11월 24일자 [유신헌법 확정을 보고] 좌담회 중 박일경 발언 중에서) 헌정파괴를 감행한 것이다.

### "유신개헌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조치"

이 폭거에 대해 조선일보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적극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각계의 지지성명과 긍정적 반응만을 보도함으로써 독재권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정당화했다. 조선일보는 유신 선포 다음날인 10월 18일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고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유신 합리화에 열을 올렸다. 이 사설에는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보다 분명하게 유신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밝힌 표현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헌법 기능의 일부 정지와 아울러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하여 만부득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헌정파괴'를 정당화한 것이다. 심지어 이 사설에는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탈각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독재권력 정당화에 급급한 나머지 궤변과 곡필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제정세와 남북대화 국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는 유신의 명분이 허울뿐이라는 것은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헌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일명 유정회 의원)에 대한 일괄 추천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1인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유신개헌 전후의 한국 사회는 무조건 유신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사건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도시빈민들의 광주대단지사건, 대학생들의 교련반대투쟁,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투쟁 등이 잇따랐다. 재야에서도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반독재투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도시표의 52.3%(특히 서울에서 58%)를 얻는 성과를 올렸다. 총선에서도 야당이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의석을 차지했다. 양대 선거 결과는 독재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었던 셈이다.

유신개헌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헌법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에 급급했다. 조선일보는 10월 28일 [유신적 개혁의 기초-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에서 "발의칙의 문제의식이 이렇듯 왕성하고 과감한 개혁이 담긴 개헌안을 우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주제도의 후퇴를 가져온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함으로써 빚어졌던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일소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의회를 행정부에 종속시킴으로써 대통령이 견제 당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알맞게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신개헌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곡학아세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같은 날 실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아시아 질서는 미일의 중공 접근 내지 수교로 안정체제의 균형이 깨어질 것으로 판단...이 중대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아시아가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해빙관계로 접어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진척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것을 "희생을 강요하는 도전적 시련"으로 보았다. 결국 유신개헌의 당위성을 강변하다 보니 전향적 국제정세마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찬양기사 시리즈 '축포' 속에 탄생한 유신정권

조선일보는 유신선포 전후 그 어느 신문보다도 사실·보도·좌담·기고 등 여러 형식의 기사를 동원해 노골적인 유신찬양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11월 23일자에 실린 [새역사의 출범]이라는 사실은 유신개헌 지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나타냈다 .....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그의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영도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원의 발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뜨거운 애국심' '뛰어난 영도력' 등의 표현은 정부 기관지에서도 사용하기 민망한 표현이지만 조선일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사실 서술 퍼런 계엄령 하에서 반대운동을 철저히 막아 놓은 채 진행된 투표에서 절대다수의 찬성표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문제의식과 사명감에 불타는 박 대통령의 영단에 의하여 태동된 10월유신은 이에 대한전체 국민의 ..... 압도적이고도 열렬한 지지·찬성에 의해 확고부동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전국 70.3%, 서울 57%라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치러졌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대통령 선출권이 박탈되고, 야당 인사들의 참정권이 철저히 봉쇄된 채 친여 인사들 일색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찌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12월 23일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단독후보 박정희는 총 대의원 2천 3백 59명 중 2천 3백 57표의 찬성표를

얻어 99.9%의 지지율로 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투표 절차의 오류로 무효 처리된 2표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완전 1백%의 지지율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2월 23일, 24일, 28일 등 3일에 걸쳐 유신체제에 대한 확실한 지지와 충성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실을 게재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단독후보로 추천한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12월 23일 [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영광스런 순간에 공감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에 합당한 후보인물을 추천하는 절차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12월 24일자 사실 [즐기찬 통일에의 의지-8대 대통령 선출을 경하하면서]에서는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새로운 중책을 맡은 박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족의 앞날에 힘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특히 12월 28일자 사실 [새역사의 전개-제8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경하한다]는 미사여구가 총동원된 유신 찬양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와 근대화의 씨앗을 뿌려 가꿈으로써 이 나라 국민의 뼈에 젖은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용기와 자신으로써 대체해 주고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냉전 속에서의 동족상잔과 남북결원의 민족사에 10·17 구국의 영단으로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새역사를 위하여 정초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취임토록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덥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의 10·17 '쿠데타'를 도리어 '구국의 영단'이라고 추켜세운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5·6·7대나 대통령을 역임한 그를 또다시 환영하는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영도력 때문이다. 그의 높은 사명감과 뛰어난 능력과 역사의식의 정당성 때문이다 ..... 온갖 난경서 오늘의 굳건한 역사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그의 훌륭한 정치역량을 우리는 더욱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더욱 전망적인 민족통일의 사명감과 구국중흥의 신념에 불타는 탁월한 영도자를 가졌다." 유신시절의 조선일보 사실이 '위대한 수령' 운운하는 북한의 선전문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선일보에게 정론직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 '박정희를 그리며'에서 '박정희를 넘어서'로

합법적으로 철권통치의 칼자루를 쥔 박정희 정권은 이후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정치적 타협이나 대화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권력을 지켜 왔다. 박정희가 집권하는 동안 각각 계엄령 3번, 위수령 3번, 긴급조치 9회가 발동되었다. 이 기간을 합산하면 자그마치 1백5개월이나 된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에 따른 비상계엄으로부터 부마항쟁에 따른 위수령까지 초법적 방식을 통해 통치를 시작했고 마감했다. 총 집권기간인 2백20개월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이 공포정치의 시대였던 것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의회민주주의는 부정되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는 차단되었고 관료사회의 선의에 입각한 경쟁도 봉쇄됐다. 독재정치, 정경유착, 권연유착, 부정부패, 복지부동, 관치금융, 정보공작, 인권유린 등 우리 시대를 읊아냈던 부정적 편린들이 뿌리를 내린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물론 박정희와 관련해 경제성장에 대한 찬반과 논란이 많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압살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외면한 채 박정희찬양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편향이며 기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유신개헌과 유신체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서 검열을 통해 기사가 삭제된 흔적을 찾기는 거의 어렵다. 오히려 당시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의중을 알아서 미리 자기검열을 행한 한국언론의 굴종의 단면이 엿보인다.

“우리의 보다 진전된 내일은 과거지향적 ‘박정희 되살리기’가 아닌 미래지향적 ‘박정희 뛰어넘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 조선일보의 '박정희 살리기'

#### 유신찬양도 언론자유다?

18년간의 군사독재가 땅에 묻힌 지 꼭 18년만에 부활한 박정희 신드롬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언론은 단연 조선일보다. 물론 중앙일보도 비서실장의 회고록을 20회에 걸쳐 실었고 [실록 박정희 시대]를 장기간 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박정희의 정치적 부활을 기도한 대표적 언론으로 꼽힌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월간조선까지 동원해 박정희 살리기를 시도했다. 82년 이후 현재까지 월간조선은 박정희 관련 기사를 총 1백48건이나 실었다. 이는 1년에 7건 이상의 기사가 게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82년 이후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관련 기사를 실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사를 보면 비서실장, 유족, 관료 등 박정희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신변잡기식 회고담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양계획’ ‘사우디 아라비아와 안보경협’ ‘등소평과의 회담 추진’ 등 일명 ‘미완성 프로젝트’ 등을 별다른 검증없이 게재하여 선견지명과 추진력은 물론이고 청렴과 소탈함까지 갖춘 ‘영도자’ 혹은 ‘혁명적 지식인’으

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는 완벽한 인물이었는데 부하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책임전가가 뒤따른다. 마치 이승만은 괜찮았는데 이기붕이 문제였다는 식이다.

이들 기사가 회고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구시대의 인물을 되살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특히 조선일보가 90년대 이후 박정희 관련 기사를 부쩍 많이 실는 것은 개혁과 민주화의 진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박정희 전기까지 연재하고 있는 조갑제 기자는 98년 8월 5일발행된 뉴스피플에서 “권위주의 정권일망정 독재는 아니었다 …… 언론의 자유와 야당의 견제와 비판기능이 상당히 살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3선개헌 유신개헌 찬양으로 얼룩진 조선일보의 보도도 ‘언론자유’에서 비롯된 셈인지도 모르겠다.

본질과 과정을 무시한 채 현상과 결과만을 중시하다 결국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21세기를 코앞에 두고도 화려했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명암과 청탁을 안고도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처럼.



개발독재형 경제 정책이 IMF 사태로 결국 파산 선고를 맞은 가운데 진행되는 박정희 미화작업은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쿠데타에 성공한 뒤 박정희 소장이 서울시형 앞에서 육사생도들의 가두데모를 지켜보는 장면.

## 5. 집중분석4 - 조선일보의 전두환찬양 곡필사

### 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기사는 '현대판 용비어천가'

80년대 한국언론사는 한마디로 굴종과 왜곡의 역사였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동원한 대표적인 통치수단이 바로 언론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권력이 던져 주는 보도자료와 보도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충견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두환 정권 옹호와 찬양의 선봉에 섰다.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우리는 지난해에서 조선일보가 사회의 모순에 맞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는지를 목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해 보니 양상은 정반대였다. '적대적'은 '우호적'으로, '공격'은 '찬양'으로 바뀌었다. '도황소격문'이 하루아침에 '용비어천가'로 바뀐 셈이다. 일찌감치 광주시민을 '난동자'로 매도하며 권력자의 품에 뛰어든 조선일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가 설치된 이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독재자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을 서슴지 않았다.

### 1. 전두환 집권과정 관련 보도

#### '대통령 만들기' 곡필 원조는 「인간 전두환」

광주에서의 '화려한 휴가'를 마친 신군부는 80년 5월 31일 국보위를 설치했다. 그것은 그들이 권력장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전두환에 대한 찬양과 미화를 본격화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다.

조선일보는 80년 6월 8일자에 「국보위, 일대 사회개혁 단행 방침」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정치 군인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급조한 초헌법적 기구의 활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부각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8월 5일자 1면 머릿기사로 「전국 불량배 일제 소탕」을 올렸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이 날 사설 「사회악 수술에 대한 기대」에서 “국보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심층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에 대한 기대”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중에 히틀러식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평가받은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후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과 5공정권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방침은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실도 빠짐없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전두환 개인을 본격적으로 미화한 것은 8월 23일자 「“새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 전 육군대장 전역식」이라는 기사부터다. 조선일보는 전역식 다음날인 8월 24일 「새시대'개막과 새정치」라는 좌담 기사에 「가장 잘 훈련·조직된 군부엘리트, 도덕성·성실성 높고 진취력 강해」 등의 제목을 뽑아 전두환의 지도자적 자질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 8월 28일자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을 보면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은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당시 ‘우리’라든가 ‘국민’으로 통칭되는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제 국민의 피를 손에 묻히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게 소망과 기대를 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에 대한 미화 기사 중 백미는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이다.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 등의 낯뜨거운 소재 목이 등장한다. 기사 내용은 더욱 민망하다.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 운운하는 작태를 보면 신문 기사인지 위인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 2. 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 빈도

#### 전두환 사진 한 달에 22일 1면 등장 '진기록'

5공화국 당시 전두환의 사진은 조선일보 1면에 얼마나 자주 등장했을까. 우리가 81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12개월을 무작위 선정해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조사결과 전두환 사진 게재 빈도수는 평균 53.8%로 동아일보의 44%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3년 5월의 경우에는 무려 22일이나 사진이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휴간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결코 노동신문이나 인민일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된 86년 10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87년 12월에는 KAL기 폭파사건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그런 큰 뉴스가 있었기에 전두환 사진은 더 자주 게재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신문 1면에 대통령의 사진을 거의 매일 등장시키는 언론에게서 정권의 비리나 실정을 지적하려는 비판정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조선일보 1면에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대통령만이 있을 뿐이다. 흔히 말하는 ‘땡전뉴스’는 조선일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표1) 81~87년 조선·동아 1면 대통령 사진 게재건수

매월 총 발행일 = 100%

연도	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게재건수 (괄호안은 총 발행일)	백분율(%)	게재건수 (괄호안은 총 발행일)	백분율(%)
1981	1월	19(26)	73.1	16(25)	64.0
	2월	21(24)	87.5	19(25)	76.0
1982	3월	16(27)	59.3	11(27)	40.7
	4월	14(26)	53.8	15(26)	57.6
1983	5월	22(25)	88.0	13(22)	59.1
	6월	17(26)	65.4	15(26)	57.7
1984	7월	12(26)	46.2	11(26)	42.3
	8월	8(27)	29.6	7(27)	25.9
1985	9월	10(26)	38.5	4(25)	16.0
	10월	10(26)	38.5	7(26)	26.9
1986	11월	10(27)	37.3	6(25)	24.0
	12월	7(26)	26.9	5(25)	20.0
평균		14(26)	53.8	11(25)	44.0

\*년도가 발행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 중 발행일에서 제외함

### 3. 전두환 업적 평가 관련 보도

#### ‘민주주의 파괴자’를 ‘민주주의 완성자’로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뽑혔다. 특히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그는 ‘민족사의 부정적 인물’ 3위에 뽑히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집권기간 동안 매년 3월 3일 취임 기념일 전후에 전두환은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장본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의사회를 실현한 영도자로 추앙받았다. 바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보수언론에 의해서.

취임 1주년인 82년 3월 2일자 「자율사회 문을 열었다」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통일문제에서 전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과찬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제5공화국 1년」(3월 3일자)이라는 기획기사에서는 “전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통치철학은 ‘민주복지국가의 건설과 정의사회의 구현으로 자주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83년 취임 2주년에도 「‘화기’로 안정 다진 제5공화국」(3월 1일자) 「의지로 이끄는 경제 ‘한 자리 물가’ 기록」(3월 2일자), 「우리 시대 모두의 과업 ‘선진조국의 꿈」(3월 3일자) 등 극찬이 이어졌다. 게다가 이 기사들에는 농가에서 전두환 부부가 농민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 청와대에 초청된 어린이와 함께 한 사진이 보기 좋게 곁들여졌다. 전두환 집권기간 동안 찬사는 쉽없이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집권 후반기인 86년 3월 4일자 「전 대통령의 치적과 과제」에서 “전 대통령 시대의 지난 5년은 대내적으로는 안정을 바탕으로 한 착실한 성장, 대외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다진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매년 새해 첫날 1면에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김없이 실렸다. 조선일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신년사와 자사의 연두사를 위아래에 나란히 배치했다는 점이다. 편집 기교상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칫 전부 대통령의 신년사로 착각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제목도 천편일률이다.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계의 중심권으로 계속 전진」, 「동행자 의식으로 안정 이룩」 등의 제목에서 독재정권의 만행과 암울한 시대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고?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가서 당시의 조선일보를 들춰 보라.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선일보는 전두환의 개인적 성품에 대한 미화에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82년 3월 4일자 「부지런한 대통령…사람 많이 만난다」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고 활달하면서도 늘 자신감에 차 있는 전 대통령의 성품……대통령의 성격 중 제일 좋은 것이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 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물론 조선일보처럼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의 의견이야 잘 들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니다. 특히 3월 1일자 「‘화기’로 안정 다진 제5공화국」의 “외유내강이랄까 자상하고 섬세하며 죽대가 있으나 인정미가 많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분”이라는 표현은 기사라기보다는 제도교육을 잘 받은 초등학교 모범생의 ‘위인전 감상문’ 수준에 불과하다.

### 4. 해외순방 관련 보도

#### 집권연장 부추긴 조선일보의 ‘세계지도자론’

5공화국 집권기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진행된 대통령 해외방문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전두환의 위대성과 인물됨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좋은 배경이었다. 예컨대 81년 미국방문 당시 조선일보 지면에 올려진 제목을 보자. 「솔직하고 확신에 찬 연설…분위기 휘어잡아」(2월 4일자), 「위트로 이끈 오찬장 화기의 폭소」(6월 27일자), 「운동복 차림, 털어놓고 긴 대화」(6월 28일자), 「교민들과 된장국 들며 격려」(4월 8일자) 등등. 조선일보는 해외방문 기간 전두환의 모습을 유머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소탈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을 ‘세계적 지도자’로 내세우는 데도 열성적이었다. 「환영, 방콕 뒤덮은 태극기 물결」(81년 7월 4일자), 「왕실 전통 깬 환대」(4월 9일자) 등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환대받는 모습을 기사화하여 전두환을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각시킨 것이다. 사진 속에서도 전두환은 손님을 맞는 주인처럼 여유있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그려졌다. 해외방문 기사와 관련해 환영 인파의 모습도 빠지지 않고 조선일보 지면을 장식했다.

순방성과를 과장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 81년 전두환의 미국방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철군불안’에 깨끗한 종지부」라는 제목의 특집대담을 실었는데 「안보에 대한 공통된 인식…두 정상 의기투합」이라는 소제목까지 뽑아 전두환의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미 새 동반 시대」라는 특집기사(5회)와 관련 사실을 순방기간 내내 심기도 했다. 86년 유럽순방 때도 「전 대통령 다진 길에 꾸준한 보충 외교를」이란 제목의 사실에서 “상호간의 희박성을 일소시키고 새롭고 활력있는 관계”를 만들었다며 추켜세웠다.

사실 이러한 언론의 무조건적인 지지 때문에 민심을 오관한 전두환은 정권 연장을 기도하게 된다. 급기야 국민의 개헌 열망을 무시한 채 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자충수였다.

### 5. 4·13 호헌과 6·29선언 관련 보도

## 호헌해도 개헌해도 언제나 '탁월한 선택'

전두환은 87년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논의를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것과 현행법(대통령간선제) 하의 대통령선거 실시 방침을 발표했다. 그것은 대통령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의지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권력의 편에 섰다. 호헌 발표 다음날인 4월 14일자 사설 「4·13 결단」을 통해 “현행 헌법에 따른 당초의 단임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시간적·상황적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정국을 설명하며 쓴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라는 표현이 걸작이다. 조선일보에게 전두환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보였던 것일까. 조선일보는 민주화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무식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왜 자꾸 나서서 개헌이니 직선제니 떠드냐는 심보였을까.

그러나 호헌조치를 통해 정권연장을 기도하려 했던 전두환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국민, 재야, 야당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절대권력에 항거한 국민은 87년 6월 29일 절대권력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 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29 선언이 국민들의 투쟁으로 얻어 낸 성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는 6·29를 수용한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를 다룬 7월 2일자 사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설은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제안은 집권세력의 공식 명제로서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까지 무조건 옹호하고 보는 조선일보의 꺾대 없는 보도는 88년 2월 전두환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 6. 전두환 퇴임 관련 보도

###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도 위대한 업적?

전두환은 88년 2월 25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전후해 조선일보는 단임제 실현의 의미를 ‘열렬히’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거기에서 5공화국의 불행한 탄생과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2월 21일자 전두환 퇴임회견을 기사화한 조선일보는 「‘4·13’ 이후 가장 괴로웠다」며 인간적 고뇌를 부각시켰다. 특히 2월 24일자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홍사중 칼럼은 “권좌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굽히지 않은 전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라고 예찬한 뒤 “아무리 강력한 인간이라 해도 권력의 부패를 끝까지 견디어 별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며 절대권력을 누려 온 전두환의 인간적 고뇌와 어려움을 헤아리기에 바빴다. 2월 25일자 이영덕 정치부 차장은 기자수첩 「송구영신」을 통해 “약속된 단임제는 상당한 찬사가 따를 수 있다고 해야겠다”며 단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 기자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유혹과의 싸움이다. 역대 대통령 중 그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셈이다”라면서 전두환에 대한 아부로 일관했다.

퇴임 다음날인 2월 26일자 사회면에는 「“대통령이 시민 됐다” 환영」 「막걸리 대접하며 “자랑스럽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7년 단임의 약속을 실현하고 돌아온 전 전임 대통령을 맞는 연회2동 주민들은 이 날 아침부터 환영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고 쓰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시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무슨 대단한 공적이라도 남긴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무래도 자칭 일등신문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 할 수 있다.

## 7. 5공화국과 조선일보

### 초고속 성장의 비결은 권언유착

조선일보는 5공화국이 들어선 80년대에 급격히 성장했다. 우선 이 기간 동안에 수치상 놀라운 신장세를 보여 준다. 80년 대비 87년 매출액이 4백28%, 79년 대비 87년 자산총액이 9백27%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주는 중앙일보의 당시 전문경영인 홍진기를 제외하면 개인 소득세 고액납부자 1백위 안에 든 유일한 언론인이다. 폭압의 80년대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초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5공화국의 언론정책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해직 등의 폭력적 구조조정으로 공급이 한정됨으로써 소수 언론사에 시장독점이 자연스럽게 부여됐다는 것이다. 75년·80년 언론과동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해직기자가 적었던 관계로 양질의 인력이 축적되어 이것이 편집과 취재의 우위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있다. 80년대의 경제 활성화로 인한 광고시장의 성장과 조간신문 선호현상도 조선일보의 우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에선 뛰어난 경영능력과 앞서가는 정보력, 편집에서의 기술우위 등 조선일보의 내재적 주체역량이 성장배경이 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앞서 모니터에서 드러났듯이 5공의 통치논리에 한점 어긋남 없이 순응한 것은 권언유착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당시에 조선일보만이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5공에 부역한 언론인이 유독 많았던 경향신문은 서울신문보다도 더 친정부적인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초법적 기구로 만든 입법회의에 당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 참여했던 점이나 5공 출범부터 언론정책의 기초를 형성했던 허문도, 이후 정부여당의 요직을 차지한 김윤환과 김용태, 80년부터 85년까지 편집국장을 지내고 바로 민정당 전국구로 의원 배지를 단 최병렬 등 5공의 핵심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전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사실은 권언유착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가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며 호헌을 지지했던 것은 단순히 억압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적극 공감하여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은 마땅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탈법적인 권력을 비호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합리화한 것이 ‘합리적 개혁을 포함하는 광의의 보수’로 치장될 수는 없다. 그런 걸 다르고 속 다른 치장으로 더 이상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21세기를 앞둔 문명사회에서 한 권력자에게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바친 대가로 얻은

일등신문의 명성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 8. 전두환과 조선일보

### 기회주의자는 기회주의자를 질투한다?

“낮뜨겁다 못해 속이 뒤틀린다.” 시정잡배의 육두문자가 아니다. 언필칭 일등신문 조선일보 9월 3일자 ‘만물상’ 이란 고정란에 등장한 표현이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합당에 대한 조선일보의 독설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인제 등 국민신당 관계자들을 ‘기회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어제까지 김영삼이라는 맹주를 받들며 김대중 타도에 반생을 바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김영삼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김대중 세력 앞에서 만세삼창을 부르는 장면은 너무나 희극적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것이 ‘똥 묻은 개’의 분수 모르는 양탈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해 없기 바란다. 국민신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의 철저한 기회주의를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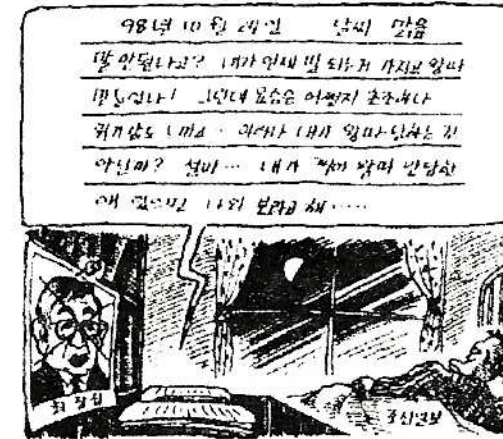
80년 9월 1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전두환은 잠실체육관에서 9천여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사심 없는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이 나라의 장래가 더욱 명랑하게 번영 속에서 발전하기를 염원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95년 12월 2일 ‘권력의 끈이 떨어진’ 전두환은 연희동 골목에서 옛 부하들을 거느리고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그 원죄에 대한 자복이 없는 한 전씨의 백마디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설을 실었다.

여기서 전두환의 ‘원죄’란 다름 아닌 광주학살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말한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폭도로 매도하고 학살자를 영도자로 찬양한 조선일보. 그러나 자칭 영원한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는 자신의 ‘원죄’를 망각한 채 유한한 ‘낮의 대통령’ 전두환에게 원죄를 자복하고 무릎을 꿇으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계엄군의 전남도청 무력진압 다음날인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실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체에 자체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쿠데타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는 망극했던 것일까. 조선일보 사주(방우영)와 간부들(송지영, 김윤환, 남재희)은 쿠데타의 전과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참여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부정한 권력의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오호 통재라! 김윤환, 최병렬 등 조선일보 간부 출신 정치인들은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95년 12월 전두환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5·18특별법 의원입법안에서 명했다.

정치인의 기회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나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자격자들이 도리어 목청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희극적이다. 적반하장의 비판을 보고 있노라면 낮뜨겁다 못해 속이 뒤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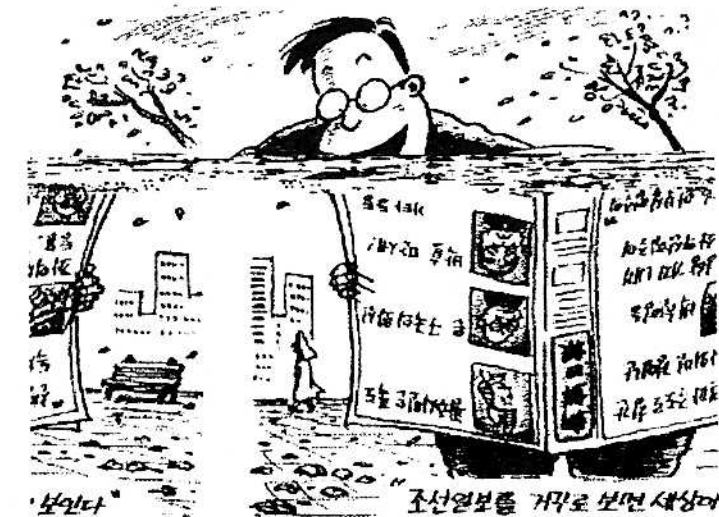
## 만화로 보는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사건



한겨레 10월 26일



한겨레 10월 30일



한겨레 11월 4일

## 6. 집중분석5- 조선일보의 노동, 사회, 인권 보도 곡필7선

### ‘전태일 분신 사건’ 유일하게 보도 안 한 조선일보

한국언론에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라는 오명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곧 역사를 왜곡한다. 뿐만 아니라 왜곡 편파보도 속에서 인권유린은 은폐되거나 정당화된다. 겉으로는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을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은 한국언론. 그 대열의 선봉에는 항상 조선일보가 있었다. 민언연 신문모니터팀이 조선일보 보도비평을 마친 뒤 내린 결론이다.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꾀하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지난호에서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여기에서 ‘외부’는 북한을, ‘내부’는 남한을 가리킨다). 이번호에는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대치되는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 주저없이 매도하였다. 이런 조선일보의 공세와 횡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한 목소리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묵살 당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과 현상이 조선일보의 오만을 키워 온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사실 우리는 그간의 모니터 경험을 통해 조선일보의 이념적 공세와 횡포가 상습적(?)이라는 점과 그 오만함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부터 기술하려는 내용은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된 작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1. 전태일 분신 사건 관련 보도(70년 11월)

70년대의 서막은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함께 올랐다. 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당시 22세)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절규하다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항거해야 할만큼 당시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건 다음날인 11월 14일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이 사건을 사회면에서 다루었고 16일에는 사실을 내보냈다. (일요일이었던 15일 대부분의 일간지는 휴간했다.) 하지만 그 이후 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은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축소 묵살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 술 더 떴다. 동아, 조선, 중앙, 한국 등 4대 중앙일간지 중에서 조선일보만이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요일인 15일 ‘유일하게’ 신문을 발간하고도 침묵을 지켰다. 다른 신문들이 사실을 내보낸 16일에도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17일야 [한 청년 직공의 참화가 말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었을 뿐이다. 마지못해 뒤늦게 사실을 내보낸 혐의가 짙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면 조선일보는 당연히 사건 보도를 했어야 옳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도 한달 월급이 1천5백원밖에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1단 기사 하나 내지 않은 조선일보가 과연 사실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운동은 존재하고 있는가”라며 노동운동을 타할 자격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묻고 싶은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악덕기업주보다는 노동운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느껴졌다.

### 2. 부천시 성고문 사건 관련 보도(86년 7월)

기사는 검찰발표문으로, 사실은 “정치적 비화 안된다” 지난 86년 6월 발생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횡포와 부도덕성이 폭로되어 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인권과 진실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언론을 향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언론들은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군사정권의 ‘보도지침’만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이 과정에서 촌지도 오고간 것으로 밝혀졌다. 89년 1월 13일자 [기자협회보]는 이 사건을 ‘촌지로 얼룩진 언론왜곡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기자협회보]는 “대변인 봉투 건네며 ‘오늘은 좀 많습니다’” “취재기자의 고뇌…… ‘저는 기자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등의 생생한 증언을 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의 제목과 기사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8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성적모욕’ 없고 폭언 폭행만 했다]라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목으로 뽑아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운동권, 공권력 무력화 책동]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제목까지 달았다. 또한 [‘부천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급진세력의 투쟁전략 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 한 사건]이라는 검찰 발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권인숙씨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결국 이 기사는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 줄 것”이라는 독재정권의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설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조선일보의 ‘빠딱한’ 시각이 읽혀진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사설 [‘부천시 사건’에서 얻는 것]에서 ‘성고문’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인권 상황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비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진심’은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 사설의 결론에서 솔직하게 드러났다.

### 3. 전교조 결성 관련 보도(89년 5월)

#### 조선일보의 ‘전교조 빨갱이 만들기’ 입체작전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미복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가 결성된 지 10년만의 일이니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교조는 비인간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순수한 열망 속에서 탄생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교조의 노선과 성격이 ‘급진’과 ‘과격’이 아니라 ‘온건’과 ‘합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였다.

그런 비상식을 조장한 장본인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마치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전교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했다.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와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의 이견을 부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신문들은 작은 지면이나 할애하여 운영규 전교협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는 등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유독 조선일보만은 전교조의 정당한 주장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다. 조선일보의 전매 특허(?)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이념교육을 하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색깔론을 전개할 때면 거침이 없어진다. 예컨대 89년 5월 26일자 [학부모들의 우려]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교원노조 문제는 단순히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의 어머니회가 제기한 우려를 열거한 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그렇다고 전교조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골치 아픈’ 이론 논쟁보다는 ‘손쉬운’ 사상논쟁을 택한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날자 사회면 ‘기사 배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일보 편집자는 [전교협 회장 사무처장 검거령]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간에 [평양학생축전 포스터 단국대에 대량 내분여]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 바로 오른쪽에는 [어젯밤 연대서 교육악법철폐대회]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어수룩한’ 독자라면 그 사진이 전교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부인하겠지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교묘한’ 편집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월 28일자 [‘교원노조’, 이해와 걱정]이라는 제목의 류근일 칼럼은 더욱 교묘했다. 류근일 논설위원은 “우리가 직면한 교육현실의 고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타개에 의해

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문을 열어 마치 전교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성동격서(?) 전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대목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일부 교사들이 혹시나 그 어떤 치우친 시각에서 자기 자녀들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사뭇 급진으로 몰아가고 물들이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비비폰 말투로 자신의 ‘본심’을 내보였다. 사상논쟁으로 귀결시킨 것이다.

전교조 결성 이후 조선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월 30일자 사설 [학교가 싸움판 안돼야—전교조 결성의 과문]에서 “그러나 그것(법의 규제)을 모를 리 없는 교육자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시되어야 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는 이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교사들의 방식을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 4. 유서대필 의혹 조장 관련 보도(91년 5월)

#### 진상규명 필요 없다 마녀사냥이 최고다?

지난 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자살로 야기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서는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서대필 여부, 수첩조작 여부, 김기설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엇갈린 진술의 진위 여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유서대필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언론은 검찰과 강기훈씨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필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지면을 구성하여 대필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검찰의 발표는 사회면 머릿기사나 적어도 6단 정도로 ‘크게’ 기사화한 반면 강기훈씨를 대변한 전민련의 발표는 2-3단으로 ‘작게’ 취급하였다.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던 셈이다. 5월 9일 조선일보는 김기설씨의 분신 보도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분신현장 2-3명 있었다]라는 제목의 검찰발표를 실었고 왼쪽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세력 있다]는 제목으로 박 홍 전서강대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5단에 걸쳐 실었다. 이들 기사의 제목과 지면 구성은 김기설씨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는 5월 19일자에서도 검찰발표를 인용해 [“김기설씨 유서 필적다르다” 검찰-대필용의 20대 전민련 간부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뽑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기사는 김씨가 10년 전 조카의 생일에 보냈던 축하카드 글씨와 유서 글씨를 같이 실어 대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6월 15일자 사설 A천주교측의 정당한 결정B에서도 “대필한 사실이 없다면 뗏뗏이 나와서 수사에 응할 일이지...수사는 고사하고 일체의국가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듯 버티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강씨를 몰아 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담당자인 김형영씨는 80년, 92년, 98년 세 번에 걸쳐 허위감정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따라서 불충분한 증거로 유서대필을 기정사실화하고 한 청년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조선일보는 이 사건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조선일보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 5. 철도 지하철 파업 관련 보도(94년 6월)

### [가장 부적절한 파업]은 '가장 부적절한 사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식은 철저히 도식화된 것이었다. 우선 조선일보는 파업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폭력파괴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한편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여 노동자들에게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응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반복되었는데 지난 94년 6월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그에 대한 반발로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와 달리 파업을 촉발시킨 공권력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실을 동원해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인데 조선일보는 아예 '때리는 시누이'로 나선 셈이다.

조선일보는 6월 17일자 사실 [가장 부적절한 파업]과 6월 24일자 사실 [불법과는 타협 없다] 등을 동원해 노동악법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단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일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의 해계모니 투쟁으로 파업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본질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강조하였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혼수한 셈이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함께 진행된 일부 사업장의 연대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자에 단호한 조치를' (6월 28일자 사실 제목) 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업 발생 당일 '교통대란' '정치투쟁' '국민이 인질인가' 등의 용어를 동원해 파업에 대해 비난하고 매도하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검찰 본격 수사] [수출 지체 하루2백억] [대정부 선전포고] [전직기관사-시민 "한마음 운행"] 등의 제목을 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강조하였다.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도한 셈이다.

## 6. 연세대 사건 관련 보도(96년 8월)

### 경찰에게 강경진압 촉구한 조선일보의 정신상태

지난 96년 8월 발생한 연세대 사건에 대해 한국언론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왜곡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당시 언론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입장만을 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써 '객관보도'라는 보도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1면 혹은 머릿기사로 가장 많이 다룬 신문도, [한총련, 연대 과학관 '불모' 대치 "산소통 터뜨리겠다" 협박] [주사과가 장악...폭력투쟁 선동] 등 선정적인 제목을 애용한 신문도 조선일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 조선일보는 호전성(?)을 유감없이 노출시켰다. 8월 20일자 1면 기사 [필요하면 총기사용]과 8월 28일자 39면 기사 [폭력시위 '고무총탄' 쏜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발표를 부각시켜 보도한 것이다. 물론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은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에 대한 발포마져 고려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이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강경진압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혹시 조선일보는 8월 23일자 사실 [경찰진압의 문제]도 있지 않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제목에 현혹되면 안된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비판한 것은 결코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경찰의 의지와 의욕의 부재가 큰 문제다" 라면서 "경찰을 이대로 나 뒤희는 안되겠다"고 호통을 쳤다. 더욱 강경한 진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목에서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동시에 펜을 함부로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다). 실제로 격렬한 시위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진 것은 역시 '색깔론' 공세였다. 조선일보는 14일자 [ '신춘사태'의 본질]에서 한총련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 한 패거리가 돼 쇠파이프와 육탄공세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집단" 이라고 규정한 뒤 "친북세력의 이런 밀어붙이기는 지금 착실히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친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 전체를 친북으로 단정하는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식 재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운동이 통일논의를 대중화하고 진전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전면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연세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총련 학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다. 조선일보도 8월 20일자 47면에서 인정했듯이 "대학생들은 1백여 명이 탈진상태.....경찰봉쇄로 음식물 공급이 끊기자....."와 같이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 '엄마' 작전]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동원해 혹시라도 생겨날지 모를 학생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차단하려 했다. "다분히 정서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웬 갑작스런 엄마타령인지.....눈물짜기 작전"이라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언론의 횡포에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7. 북한 식량지원 관련 보도(97년 3월~5월)

### 굶어 죽는 소말리아는 도와도 북한동포는 안된다?

지난 97년 봄과 여름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다. 당시 북한은 수해와 가뭄 등 계속된 자연재해로 사상 초유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터였다. 뼈만 남은 앙상한 팔다리의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는다는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처럼 굶어 죽는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은 “동포애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나섰다. ‘동포애’를 ‘전도된 대북지원 논리’로, ‘인간의도리’를 ‘감상적’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97년 3월 31일 정부의 쌀지원 허용 발표 이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조선일보가 형식적 논리를 내세운 ‘심사’가 무엇인지 읽혀진 셈이다. 이는 다음의 대목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민간차원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감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애국은 죄의식만 짜내려는 전도된 대북 지원 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난한 것이다.

물론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키가 자라지 않고 두뇌발달이 정지됐다거나, 심지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데도 굳이 “실상이 과장되어 있고 과장법을 통해 균량미를 챙기고 있기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듯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7년 5월 말 지정기탁제도의 합의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북한군 식량탈취가 오보로 확인된 이후에도 조선일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동포의 굶주림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쌀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의 태도가 변한 다음에”라는 토를 달았다. 심지어 [북의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정부도 부정한 대북정책인 ‘흡수통일’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휘몰이하는 식’이라거나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당시 1년에 8조원을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남한과 먹을 것이 없어 참혹하게 죽어 가는 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감상적인지 자명해진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4월 14일자 사설 [북 기아 우리탓이라고?]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도 식량자급율이 27%밖에 안되고 외채가 1천억달러에 이른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고베 지진 때나 아프리카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했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29일자 칼럼 [‘금강산행’의 조건]에서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로 남쪽이 달귀지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시대적 흐름이 바뀔 수는 없다.

최근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소가 북한으로 가고 금강산 관광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통일 독일의 한 국회의원은 조선일보의 지면을 빌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통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뒤에 얻는 기쁨은 희생과 고통보다 크다”라고. 조선일보가 경청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 7. 집중분석6 조선일보가 경제청문회에 서야 하는 3가지 이유 국가부도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아니다” 강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조선일보는 외환위기를 예측한 각종 보고서와 외신보도를 무시하거나 축소왜곡한 반면 “외환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만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외환위기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까지 ‘단독으로’ 실시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여론을 ‘앞장서서’ 주도한 조선일보는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이틀 전까지 A IMF 도움 없이 위기해결 가능(97년 11월 20일)하다고 되풀이 보도하여 당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 1. 조선일보는 앞장서서 외환위기를 축소은폐했다.

구제금융 요청 이후에는 태도를 돌변해 A나라망신 타이밍도 놓쳐B, A경제 다 망쳐놓고...제 경원 문책론도B(11월 22일)라며 정부를 가장 강도높게 비난한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코앞에 닥친 외환위기를 예측진단하는 데 실패했을 뿐더러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해 놓고도 자신들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조선일보는 모든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게 돌리는 데 급급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미 97년 초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현대그룹 산하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의 경제상황이 94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1월 7일자 [멕시코에 이어 서울]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은 지금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는 묵살하거나 왜곡하였다. 르몽드 보도의 경우는 한국경제가 닥칠 어려움을 예측, 경고한 것인데도 영뚱하게 외국언론에 비친 ‘노동계 파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막상 조선일보가 인용한 르몽드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노동계 파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국가경제가 결판날 처지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조선일보는 경제위기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단독 인터뷰, 단독 설문조사 등 ‘독자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97년 3월 8일과 9월 18일 각각 A “한국경제 위기가 아니다” (함영준 특파원),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강드쉬 IMF 총재 조선일보와 회견(강효상 기자) 등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9월 11일자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 B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주한외국 금융기관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 외환위기 경고 외신보도에 “언론자유 넘어섰다” 비난

특히 조선일보가 9월 11일자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는 외환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억지 해석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례로 “한국의 현 상황을 외환위기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즉 “현재 상태를 ‘위기’라는 표현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제 있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등의 완곡한 표현의 답변을 곧바로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해석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옳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외면한 채 “한국경제, 대기업 부도 견딜 수 있다”는 낙관 일변도식 전망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축소은폐한 기사는 계속됐다. 97년 8월 21일자 A불안하지만 위기상황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나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심각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에도 1면 톱으로 “한국 성장을 더 높아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한편 당시 외국언론들은 국내 언론의 보도와 달리 한국의 외환위기를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11월 3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긴급기사’로 전세계에 타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1월 8일 이들 외국언론의 보도가 “근거 없는 추측보도”라는 정부 입장을 대변한 [외국언론 “한국경제 비판” 정부 “왜곡이다” 강력대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11월 10일자 사설 A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 B에서도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를 다소 과장되게 비판적으로 보도 또는 전망한다든지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현재 사태의 민감성에 비추어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며 외환위기를 은폐하려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다. 더 나아가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 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물론 대다수 한국언론 또한 눈앞에 다가온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니터 결과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신문은 바로 조선일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외신에 대한 당시 정부 여당의 ‘불만’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경제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는 외환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조선일보는 98년 9월 16일부터 A본사가 정한 국가적 아젠다-한국경제 회생의 길B이라는 거창한 기획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게재된 A정쟁보다 경제다B에서 조선일보 김대

중 주필은 “경제회복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정치를 포함한 모든 쟁점들은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경제를 위해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한다.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동결하는 선언을 하자” 고 주장했다.

이틀 뒤 최청림 편집부국장 역시 A민심은 경제다B라는 칼럼에서 “사정이 대로를 확보하면 경제회생이 골목으로 밀려난다” 며 ‘경제 우선’ 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 우선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정한 ‘국가적 아젠다’ 속의 경제회생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정치권 사정정국에서 열세에 놓인 한나라당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작년 이맘때의 조선일보 보도가 잘 말해 준다. 다시 한번 1년 전의 조선일보를 펼쳐 보자. 조선일보는 97년 11월 1일 A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 B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올렸다. 이 날부터 조선일보는 ‘양심수 논쟁’ 을 주도하며 대선정국을 공안 분위기로 몰아갔다. 특히 11월 6일자 사설 A ‘양심수’ 재론B에서 “양심수 논란에 온 국민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안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양심수 논란이 대선정국에서 당시 여당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정쟁거리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놓치지 않은 것이다.

### 경제위기 극복보다 ‘대통령 만들기’ 가 우선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당시는 외환위기가 닥치느냐 마느냐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시기였다. 97년 11월 초순은 해태그룹과 뉴코아그룹이 화의신청을 하는 등 외신에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한 주간지에서 절박했던 11월 초 당시를 ‘피를 말리는 상황’ 으로 표현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그 싸움에 몰두했던 것이다.(물론 조선일보는 ‘경제문제’ 보다 ‘사상검증’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작 11월 2일 나온 이회창 후보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켰을까.)

국가부도 사태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기피하는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경제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을 부추겼던 조선일보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이다. 동시에 그것은 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는 사정에 반대를 표명한 셈이다. 결국 조선일보가 지지하는 정당이 불리해지자 경제위기니, 정쟁이니 운운하며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위기쯤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독자와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의도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조선일보는 ‘말 바꾸기’ 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IMF 재협상론—남이 하면 ‘매국’, 내가 하면 ‘애국’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말 바꾸기는 IMF 재협상에 대한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97년 12월 7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이인제 후보가 재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면을 대대적으로 할애하여 연일 비판했다. 또한 12월 9일과 11일에는 각각 A재협상의 위험성B, A불신 심화시킨 재협상론B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특히 12월 11일자 사설에서는 “한 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이 재협상론은 IMF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실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빠지게 했는데 이런 우려감은 김대중씨가 IMF 조건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더욱 증폭되고 있다(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 시각이다” 라고 단정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정치적 목적이나 근시안적 단선논리 때문에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주장은 작금의 심각한 경제현실의 개선에 장애가 될 뿐” 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엉뚱하게 김대중씨의 재협상 발언에 떠넘긴 꼴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최청림 칼럼에서도 “재협상 운운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조선일보가 먼저다. 97년 12월 2일자 사설 A IMF라는 한파B에서 조선일보는 “은행용자에 대한 통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빚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IMF측과의 추후협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라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어 12월 3일자 사설 A쓰다고 다 좋은 약 아니다B에서도 “과도한 긴축이나 저성장, 고이율 정책은 비록 그것이 IMF 정책의 단골메뉴라 해도 우리에게 너무 경쟁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이처럼 재협상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후보의 재협상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대선직후 조선일보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IMF 요구사항을 A즉각 실천해야 산다B(97년 12월 24일 김대중 칼럼)고 주장했다.

### 국민을 바보로 여긴 조선일보의 오만

그러나 또다시 조선일보는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IMF의 권고를 즉각 실천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더니 올 초부터 해외 기고가들의 ‘한국 처방 재검토’ 등의 주장을 실으며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98년 1월 18일자 A너무 가혹한 빚쟁이B에서 조선일보는 “남의 위기를 빌미로 폭리를 노린다는 국제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채상환 연장 협상은 순리에 맞게 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한국 외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온건하게 조정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3월 6일 변용식 편집부국장은 칼럼 A양약이러는데...B에서 “어느 나라에도 한국이 받아든 것과 같은 고통스런 IMF 프로그램은 없었다” 며 “IMF가 너무 쓴약을 많이 먹여 한국과 동남

아 경제가 까무라치는 결과가 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평범한 독자들이 조선일보의 표변하는 논리에 혼란스러워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재협상을 주장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주장하면 안 되는가? 물론 조선일보는 내심 자신들이 지목한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말 바꾸기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과 독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이거나 바보로 여기는 오만한 자세가 아닐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일보를 경제청문회에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 8. 집중분석7 조선일보 왜곡보도 국경도 없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조선일보는 외신기사를 보도하면서 객관적인 '인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활용'한다. 원문의 뜻을 전혀 엉뚱하게 인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원문에 잇는 말을 '작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외신 왜곡보도사례를 살펴본다.

### 1. 김대중 주필의 엉뚱한 오역, 영어실력탓?

-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용 (97년 12월 24일자) -

지난 97년 12월 24일자 조선일보 1,2면에는 "긴급제언 [즉각 실천해야 산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그는 이글에서 "우리에게 돈을 꾸어 줄 입장에 있는 외국 특히 미국의 언론논조를 종합해보면 그들이 여전히 돈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주필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공한 당사자로 김대중 당선자를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12월 22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은 김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populist)' '예측하기 어려운 (unpredictable)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없는 (unfounded)]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인기위주의 국회의원과 좌파성향의 학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의 이런 성격 규정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당선자와 그의 정부 그리고 한국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2월 22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과 김 주필의 칼럼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됐다. 김주필이 '악의적인 오역'과 '맥락을 무시한 특정 단어 부각'등의 방법을 동원해 월 스트리트 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딴지일보』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김 주필은 칼럼 후반부에서 "월가가 그(김대중 대통령)를 '말을 잘 뒤집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따옴표로 표시하여 인용한 것임을 밝혔지만 원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없었다. 추측컨대 김주필은 'unpredictable'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해도 왜곡의 문제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만 부각한 것도 문맥을 살리지 못한 인용인데 그 단어를 다시 확대해석한 것은 거듭 왜곡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unfounded'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